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1995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 I. 1980年代以後의 青年層 勞勤市場과 人的資本 形成
- II. 人的資本理論과 經濟學的 意味에서의 敎育의 機能
 - 1. 人的資本理論(Human Capital Theory)
 - 2. 經濟的 側面에서의 敎育機能
 - 3. 勞勤市場과 人的資本의 形成
- III. 青年層 勞勤力의 現況
 - 1. 初·中等敎育
 - 2. 高等敎育
 - 3. 勞勤市場
- IV. 要約 및 結論

表目次

- <표 I-1> 국내총생산 중 투자지출 비중(1992)
- <표 II-1> 임금상승률 결정요인의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15~55세)
- <표 III-1> 초·중학교의 졸업생수 및 상급학교 진학률
- <표 III-2> OECD 국가의 17세 연령층 재학생의 연령층 인구에 대한 비율(1986~87)
- <표 III-3> 국민학교 재학생수(1993~94)
- <표 III-4>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의 구조(1970~99)
- <표 III-5> OECD 국가들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1986년 6월 기준)
- <표 III-6>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1982~94)
- <표 III-7> 교과과정별 고등학교 졸업생수의 추이(1984~94)
- <표 III-8>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
- <표 III-9> OECD 국가의 중등교육과정 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 구성비(1986~87)
- <표 III-10>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추이(1979~94)
- <표 III-11> 연도별·성별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생수와 그 구성
- <표 III-12> 전공별 대학(교) 졸업생수(1980~94)
- <표 III-13> 공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수 및 비중추이(1982~94)
- <표 III-14> 한국과 OECD 국가의 고등교육과정 재학생의 비율(1986~87)
- <표 III-15> OECD 국가의 20~24세 연령의 재학률(1986~87)
- <표 III-16>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1982~93)
- <표 III-17> 청년층 노동력의 취업인구 비율의 추이(1982~93)
- <표 III-18> 비경제활동의 사유별 구성(1983~92)
- <표 III-19> 각국의 청년층 노동력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1992)
- <표 III-20> 연령계층별·교육정도별 취업자수 및 취업비율
- <표 III-21> 1983년과 1992년의 연령별·교육정도별 취업비율의 비교
- <표 III-22> 전문대학 졸업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
- <표 III-23> 대학(교) 졸업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
- <표 III-24> 공업계열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남자)
- <표 III-25> 자연계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상황(남녀총수)
- <표 III-26> 대학(교) 전공별 졸업자수 및 취업률(남녀)
- <표 III-27> 신규취업자수(1975~92)
- <표 III-28> 교육정도별 신규취업자의 구성비율(1975~92)
- <표 III-29> 산업별 및 연령계층별 취업구조
- <표 III-30> 산업별 및 연령계층별·교육정도별 취업구조
- <표 III-31> 학교졸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수(1980~94)

<표 Ⅲ-32> 청년층 노동력의 생산직 취업자의 비율(1983~92)

그림目次

[그림 Ⅲ-1] 상급학교 진학률과 불변 국민소득

[그림 Ⅲ-2] 한국의 인구구조(1980~99)

[그림 Ⅲ-3] 대학교 입학생수의 추이(남성 및 여성)

[그림 Ⅲ-4] 전문대학 입학생수의 추이(남성 및 여성)

[그림 Ⅲ-5] 경제활동참가율의 비교-남성(1983,1992)

[그림 Ⅲ-6] 경제활동참가율의 비교-여성(1983, 1992)

[그림 Ⅲ-7]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연령별 취업비율 비교(1983~92)

[그림 Ⅲ-8] 여성 청년층 노동력의 연령별 취업비율 비교(1983~92)

1. 1980年代以後의 靑年層 勞動市場과 人的資本 形成

1980년대 이후는 한국에 있어서 두터운 인구계층을 형성하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¹⁾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 세대는 우선 그 규모면에서 한국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1980년대에 성년기에 접어든 이 세대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을 위한 본격적인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이전의 세대와 구분된다. 광범위한 인적자본 축적의 욕구는 폭발적인 교육수요의 평창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이 세대의 등장과 이들이 갖은 인적자본의 내용은 향후 한국 경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은 이 세대의 진입으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 현상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청년층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① 중등교육(고등학교교육)이 대중화되었고 ② 중등교육 중 일반계(인문계)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③ 고등교육(초·전문대 및 대학(교)교육) 이수자가 증가하였고 ④ 재수생이 상당수 존재하며 ⑤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었다.

여성 청년층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① 중등교육이 역시 대중화되었고 ② 고등교육(특히 대학교육) 이수자가 증가하였으며 ③ 20대 전반(20~24세)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였고 ④ 출산율이 하락하여 저연령층 인구가 감소하였다.

한편 부문별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는 ① 흔히 '인력난'으로 표현되는 제조업, 생산직,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② 특히 인문계 졸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층의 실업, 하향취업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③ 청년층의 취업구조에 있어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관류해 설명하여 줄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이다.²⁾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인적자본이론에 입각하여 198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자료가 제시하는 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98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학교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 시기는 전후 1955~6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시기였으며, 또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상승하여 국민 다수가 차세대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된 시기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교육수요의 증대에 대하여 정부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증설과 '졸업정원제'라고 하는 대학입학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대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1980년대 후반부터의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하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언론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 그러나 6.25 전쟁직후 출생인구가 급증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들을 수용할 고교의 절대수가 부족한 현상이 빚어졌다. "매년 20만명 가까운 미진학 중졸자가 생겨났지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1980년을 전후해 대책이 급조됐지요."

당시 문교부 관계자의 말이다. "급한 대로 예산이 적게 드는 인문계 고교를 마구 신설했습니다. 무조건 설립신청만 하면 인가를 내줬어요, 나중에 기형적인 결과를 생각할 만한 여건은 아니었고 별다른 대안도 없었지요." 이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은 1980년대초 대학의 입학정원을 마구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1994, 178쪽)].

이와 같이 1980년대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수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이수비율의 증가에 의하여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을 살펴보면, 1965년 54.3%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 77.2%, 1985년 99.2%, 1994년 99.9%에 달하여 1980년대는 중학교까지의 초등교육의 국민대중화가 완료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률도 역시 1965년 69.1%로부터 1975년 74.7%, 1985년 90.7%, 1994년 98.7%로 급속히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수준은 OECD 선진국의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는 1980년대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인적자본 축적이 본격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즉 인적자본의 생산(Human Capital Production Function)에 있어서 한국의 인적자본의 형성은 질적으로 미흡하였으며, 구성면에서 다양성(variety)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적자본의 생산이 부족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산업계에서의 고등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증대,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난, 하향취업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것이며, 그 구성면에서 한국의 인적자본의 형성이 지나치게 획일적(uniform)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문계 중심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부문별 '인력난' 및 '취업난(소위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에 의하여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80년대의 인문계 중심의 급조된 교육기회의 확대는 청년층의 교육수요를 해소할 수는 있었으나 바람직한 인적자본 생산구조를 설정하지는 못하여 청년층과 청년층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의 인력정책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1980년의 대학 정원 확대 이후의 대학 졸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경계, 법학계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의 졸업생 수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인문사회계 중심의 신규 대학을 설립하여 늘어나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 것과 같으며, 결국 교육에 대한 수요의 확대를 생산적인 인적자본의 증대로 연결시키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청년층 인력의 수요자인 노동시장이 대학교 졸업생의 증가에 대하여 충분히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³⁾

1970년대의 미시경제학에서의 '인적자본혁명(Human Capital Revolution)'은 그 내용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발전론(development theory)의 입장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의 수익률이 높음을 강조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각 개인의 교육(education), 직업훈련(training), 노동시장 활동(labor activity), 임금결정(wage determination)의 형태를 실물자본에 대한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각 개인은 교육, 직업훈련의 선택,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생애임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파악한다. 청년층 근로자는 장래에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자신의 임금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기회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애임금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은 청년층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대한 수요자가 되는 것이며,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은 인적자본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급자가 된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설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적자본의 수요자인 노동시장은 시장경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기술의 변화, 세계 경제의 분업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인적자본 축적의 당사자인 청년층 노동력은 이러한 노동시장(혹은 임금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적자본 축적의 경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각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기회의 부족이라고 하는 인적자본축적 기회의 공급부족에 대하여 청년층은 '再敎育'이라고 하는 일종의 私敎育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인적자본 축적의 수요가 형성된 인적자본의 내용리라고 하는 결과에 있어서 청년층과 노동력 수요자 양자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의 대학(교)교육의 개편은 당시의 고등교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었으나 인적자본의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형성과 공급구조(고등교육 제도)에는 변화가 없는 채로 양적인 확대만 이루어졌으므로 고등교육 이수자수의 증가만큼 다양한 인적자본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대학교 입학, 대졸자의 채용이라고 하는 고급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구조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확대된 고등교육체제에의 적응은 청년층의 부담으로 귀결되었으며, 확대된 고급인력의 공급에 대한 흡수는 기업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당시의 고등교육체제의 개편이 고등교육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여 보다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고급인력의 공급의 확대는 훨씬 더 원활하게 수요로 이어졌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당시의 대학정원의 확대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 이수자수의 확대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다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한다. 다른 면에서 정부의 정책은 인적자본형성의 공급자에 있어서 시장력(market force)이 작용하는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증원 대

신 새로운 대학교육기관의 신설을 장려하는 시책을 취하였다면 새로이 신설되는 교육기관에서는 인적자본의 수요처인 노동시장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각 교육기관간의 경쟁으로 어느 한 분야에 특화하게 되어 보다 다양한 인적자본의 형성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한 예로써 포항공과대학의 성공, 최근의 전문대학의 증설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청년층 인구의 예상되는 감소로 고등교육기관간의 질적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의 인력공급은 흔히 Lewis 전환점으로 표현되는 인적자본의 무한공급점을 1975년 경에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며⁴⁾ 현재는 인력부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난과 산업계에서의 기술인력의 부족 등은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 준다. 따라서 장래의 한국 경제에서는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생산력의 증가에 의하여 노동력이 경제성장을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는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보다 격심해지는 사회적 경쟁으로 인한 자녀양육비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2000년대 초부터의 한국에서의 청년층의 인력공급은 현재보다 감소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래의 청년층 생산력의 향상은 현재보다 더욱 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 중 투자지출의 비중이 높은 자본재 투입위주의 경제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표 1-1 참조). 이러한 체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높은 이자율,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지출의 비중을 낮추어 가면서 국민 경제적인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실물자본보다 수익률이 높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높여서 노동력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적자본의 형성 및 공급체제로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의 실정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각국의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직업훈련제도는 고유한 사회경제제도의 일부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교육, 직업훈련체계의 설정을 위하여는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노동자와 기업간의 연대(tie)가 강하여 직업훈련이 기업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고(firm specific human capital),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하여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고등교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직능별 노동시장이 발달하여 산업과 중등교육학교의 연계에 의한 직업훈련(dual system)이 발달되어 있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산물로서 단기간에 쉽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교육훈련제도는 고유한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1-1> 국내총생산 중 투자지출 비중(1992)

(단위: %)

| 국명 | 한국 | 일본 | 대만 | 싱가포르 | 프랑스 | 독일 | 영국 | 미국 |
|----|------|------|------|------|------|------|------|------|
| | 36.6 | 30.8 | 24.2 | 40.8 | 19.6 | 21.1 | 16.6 | 15.5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1994.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체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를 설정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시적 노동시장정책은 그 자체가 극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정책수단의 개별적 개선도 중요하나 어떠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가 하는 개별적 정책수단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보상임금(reservation wage)⁵⁾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생산성을 높여서 그들의 시장임금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상임금은 그 가구의 소득(income)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가구의 소득수준은 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정책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로써 제조업부문의 기능인력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실업계고교 교육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나 제Ⅲ장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실업계고교 교육은 현재로서는 직업교육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문계 중등교육의 선호현상, 실업계 고졸자의 취업률의 하락, 진학률의 증가 등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하에서의 실업계고교의 양적인 확대가 생산직 인력공급의 확대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차별화로의 유도, 수요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유연성제고, 투자를 통한 교육수준의 향상이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미시적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는 정책의 대상인 목표집단(target group)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들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학 졸업생수의 확대이전(1983년)의 청년층 노동시장과 이후(1992년)의 노동시장을 비교하여 약 10년간의 격차를 두고 어떠한 교육정도별, 연령별 계층의 경제활동이 저하하게 되었는가에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19세 이하의 남성 중졸 이하의 계층, 21세 이하의 남성고졸 계층, 그리고 20대 후반의 남성대졸 계층에 있어서 양 기간동안 경제활동이 저하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직업훈련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계층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경험적 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본고의 미진함도 아울러 밝혀둔다.

넷째, 노동시장,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는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경제의 각 구성원, 즉 노동자, 기업, 교육훈련기관의 적응을 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급격한 변화는 각 당사자에 있어서 적응의 시간이 요하게 되므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대학입학정원의 확대가 실행된 직후의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차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이 제도시행 이전의 취업률을 능가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이 변화된 인력의 공급구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 실물자본과 구별되는 특성은 인적자본은 각 개인의 근로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실물자본에 비하여 축적에 많은 시간을 요하며 쉽게 이전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또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각 개인의 고유한 생애에 대한 계획(lifecycle pla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이 적응과정에서 청년층 노동력이 적절한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여 상실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는 이후에 쉽게 보충되지 못한다고 하는 국민 경제적 손실이 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제1절에서는 본고의 기본적인 시각인 인적자본이론이 교육의 수요, 직업훈련 및 생애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제2절에서는 경제학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교육의 기능에 대한 경제학적 견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교육제도는 노동시장의 작용과 밀접한 상호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3절에서는 각국에 있어서 고유의 노동시장의 관행과 교육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제1절 초·중등교육의 현황, 제2절 고등교육의 현황, 제3절 노동시장의 현황으로 나누어 시계열적 및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인적자본의 축적의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인적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훈련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⁴⁾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 있어서도 연구가 미흡하나 장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주석 1) OECD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5~24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며 일부의 국가에서만 15~29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늦은 편이므로 본고에서는 15~29세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주석 2)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는 Gary S. Becker(1975), Human Capital 참조.

주석 3) 1980년대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분석을 위하여는 수요측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구조를 포함한 인력수요구조에 대한 분석도 행해져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인력공급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주석 4) 배무기(1993), 제10장 참조.

주석 5) 보상임금(reservation wage)이란 각 근로자가 받고자 원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주석 6)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주호(1992), 배무기(1993) 제7장 참조.

II. 人的資本理論과 經濟學的 意味에서의 教育의 機能

1. 人的資本理論(Human Capital Theory)

본절에서는 G. Becker 교수의 인적자본이론을 ① 교육수요 ② 직업훈련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분석의 틀이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가. 교육수요

교육수요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적자본이론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하여 경제학에서 흔히 원용되는 Tree Cutting Down Problem 혹은 Wine Selling Problem을 소개한다. 이 문제는 최적중단점 문제(Optimal Stopping Problem)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나무를 재배한다고 할 때 어느 시점에서 나무를 베어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혹은 포도주를 저장한다고 할 때 몇 년째까지 포도주를 저장한 이후에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을 최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무나 포도주는 오래 저장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그러나 오래 두면 들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오래 된다고 하여 그 가치가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인가 나무를 절단하거나 포도주를 파는 최적의 시점이 있게 마련인데 어떠한 시점이 최적인가를 이론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원용되는 것은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오래 받을수록 졸업후의 임금수준은 높게 되나 반면에 교육을 받는 동안은 수입이 없다고 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생애임금을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어느 시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를 설명하는 데에 위의 예가 유용한 것이다. Tree Cutting Down Problem이나 Wine Selling Problem에서 나무 혹은 포도주를 t시점에서 판매할 때 그 가치를 $y(t)$ 라고 가정한다. 현재의 시점에서의 가치는 할인한 가치이므로 현재의 가치(present value) V 는 다음과 같다.

$$V = e^{-rt}y(t) \text{ 따라서 로그값을 취하면} \\ \log V = -rt + \log y(t)$$

V 를 최대화하는 t 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V 를 t 에 대해 미분하여 0의 값에 도달하는 t 의 값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c{d \log V}{dt} = -r + \frac{1}{y(t)} \frac{dy(t)}{dt} = 0$$

$$\text{그러므로 } r = \frac{y'(t)}{y(t)}$$

여기에서 r 은 할인율이며 $\frac{y'(t)}{y(t)}$ 는 내부수익률임.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나무 혹은 포도주의 내부수익률이 시간에 따라 차차 감소한다고 할 때 수익을 최대화하는 중단점은 내부수익률이 할인율과 같아지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육의 경우 투자를 한 결과를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거두어들이게 되므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게 되나

대동소이한 결과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s 라는 기간동안 교육에 투자를 하면 s 기간 이후부터는 $y(s)$ 라고 하는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자. 이때 s 기간동안의 교육투자를 하는 경우 장래의 소득의 현재 가치는

$$W(s) = \int_s^{\infty} y(s)e^{-rt} dt = y(s) \frac{1}{r} e^{-rs}$$

가 된다. 이를 s 에 대하여 미분을 하여 $W(s)$ 를 최대화하는 s 의 값을 구하면,

$$W'(s) = \frac{1}{r} e^{-rs} [y'(s) - ry(s)] = 0$$

$$\frac{y'(s)}{y(s)} = r$$

따라서 마찬가지로 s 는 $\frac{y'(s)}{y(s)} = r$ 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교육수요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교육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교육의 수익률, 즉 학력간 임금격차에 의하여서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그간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이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자수의 증가에 따라 교육의 수익률, 즉 학력간 임금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경제에서의 할인율(r) 역시 감소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할인율의 정확한 의미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할인율이다. 모든 가정이 교육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자율이 할인율의 지표가 될 것이며 이자율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보다 현실적으로 할인율은 각 가계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할인율이 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저소득으로 인하여 교육을 위한 자금을 발견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할인율은 무한대가 될 것이며, 교육에 대한 수요는 자금부족에 의하여 제한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교육열, 私敎育의 팽배로 볼 때 가계의 할인율은 계속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밟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육수요의 확대는 내부수익률(학력간 임금격차)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할인율이 계속 하락하여 왔으므로 계속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설명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적자본이 실물자본과 다른 점은 인적자본은 실물자본과 같이 자본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는 주로 가계의 소득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확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구조보다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열이 소득의 상승과 함께 상승작용을 하였음도 사실이다.

재수생의 존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현재에도 교육의 내부수익률이 할인율을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교육수요는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파악되며, 교육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팽창하는 교육수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업훈련

인적자본이론은 이 밖에도 복잡다기한 형태로 이후에 발전하였는데 직업훈련, 임금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하여는 좀더 복잡한 모형을 필요로 한다. 직업훈련, 임금결정구조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¹⁾

각 기간(년)을 t 로 표기하고 각 개인은 $t=0, \dots, T$ 라는 $(T+1)$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인적자본을 H_t 로 표기하고 전체 시간을 1이라고 하였을 때 t 년도에 1,만큼을 인적자본의 형성에 투입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1,만큼의 시간이 직업훈련에 투입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H_t 라고 하는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 $H_t(1-\ell_t)$ 만큼의 인적자본이 t 기에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다. 임금을 투입된 인적자본에 대한 보수라고 할 때 각 인적자본의 단위당 보수를 w_t 라고 하면 t 기의

임금은 $w_t H_t(1-\ell_t)$ 가 된다. $\beta = \frac{1}{1+r}$ (즉 β 를 할인율이라고 하면(즉 r 은 이자율) 각 개인의 일생의 임금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V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V = \sum_{t=0}^T \beta^t w_t H_t (1 - \ell_t)$$

그리고 각 개인은 일생의 임금의 현재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배정한다고 가정한다. 보다 완결된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는 인적자본의 생산함수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인적자본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H_{t+1} = \delta H_t + I_t$$

여기에서 δ 는 $(1 - \text{감가상각률})$ 이다. 즉 t 기에 H_t 만큼의 인적자본이 있었다면 다음 期인 $(t+1)$ 期에는 감가상각된 나머지의 인적자본 δH_t 에 t 기에 형성된 새로운 인적자본 I_t 가 추가된 인적자본이 남게 된다.

I_t 의 새로운 인적자본의 형성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_t = F(\ell_t, H_t, D_t)$$

여기에서 $F(\cdot, \cdot, \cdot)$ 는 인적자본의 생산함수, ℓ_t 는 t 기의 인적자본형성에 투입되는 시간의 비율, H_t 는 t 기의 인적자본이 양, D_t 는 인적자본의 형성에 투입되는 물질적 투입요소를 의미한다. $F(\cdot)$ 는 ℓ_t, H_t, D_t 각각에 n 대하여 증가함수라고 가정하고 또한 $F(\cdot)$ 는 볼록 함수(convex function)라고 가정한다.

$$(F_{\ell t} > 0, F_{Ht} > 0, F_{Dt} > 0, F_{\ell t \ell t} < 0, F_{Ht Ht} < 0, F_{Dt Dt} < 0)$$

이상을 완전한 형태로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begin{aligned} & \text{maximize } \sum_{t=0}^T \beta^t (w_t H_t (1 - \ell_t) - D_t) \\ & \text{subject to } H_{t+1} = \delta H_t + I_t, \quad I_t = F(\ell_t, H_t, D_t) \end{aligned}$$

위의 조건부 최대화 함수를 라그랑지(Lagrangian) 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 \sum_{t=0}^T \beta^t \{ [w_t H_t (1 - \ell_t) - D_t] - \lambda_t [H_{t+1} - \delta H_t - F(\ell_t, H_t, D_t)] \}$$

위의 라그랑지 함수를 최대화하는 ℓ_t , H_t , D_t 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하여 편미분(partial differentiation)을 취하면,

$$\frac{\partial \Lambda}{\partial \ell_t} = \beta^t (-w_t H_t + \lambda_t F_{\ell_t})$$

$$\frac{\partial \Lambda}{\partial H_t} = \beta^t (w_t (1 - \ell_t) + \lambda_t \delta + \lambda_t F_{H_t} - \lambda_{t-1})$$

$$\frac{\partial \Lambda}{\partial D_t} = \beta^t (-1 + \lambda_t F_{D_t})$$

이상의 편미분의 값을 0(零)으로 두고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번째의 식으로부터

$$(\delta + F_{H_t}) \lambda_{t+1} - w_t (1 - \ell_t)$$

위의 식은 λ_t 의 운동방정식이다. $F_{H_t} > 0$ 이므로 위의 식에서 λ_t 는 t 가 증가할수록 단조 감소된다. λ_t 는 인적자본 한 단위의 가치를 나타내므로, t 가 커질수록,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적자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게 되며, 따라서 그 가치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식으로부터

$$F_{\ell_t} = \frac{1}{\lambda_t} w_t H_t$$

즉 λ_t 가 커질수록, H_t 가 작을수록 ℓ_t 는 커진다(F_{ℓ_t} 는 작아짐).
이와 같은 원리로 세 번째의 식으로부터

$$F_{D_t} = \frac{1}{\lambda_t}$$

즉 λ_t 가 커질수록, D_t 는 커진다(F_{D_t} 는 작아짐). 여기에서 λ_t 가 커진다고 하는 의미는 λ_t 가 단조 감소하므로 연령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인적자본 축적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적자본의 축적은 (λ_t) 대부분 이른 연령층에서 일어난다(t 가 작을 때) 즉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이 작을수록 교육 또는 직업훈련시간의 기회비용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이 왜 노동시장의 진입이전에 행해지는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주며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시간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비용(D_t)은 이른 연령층에서 지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같은비용이라 하더라도 아직 긴 수익기간이 남아 있는 청년기에 지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정부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보면,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보조금은 청년층에 지출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성이 높은 지출이 된다.

셋째,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은 직업훈련이 아닌 생산에 투자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임금보다 인적자본의 축적여부가 더 중요한 관

심사가 될 수 있다. 많은 인적자본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청년층은 성년층에비하여 보다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본이론은 1980년대 이후의 교육수요의 확대와 고등교육의 증가, 그리고 단순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을 설명해 준다. 인적자본 축적의 여력이 생겼을 때 청년층은 보다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려고 하며 인적자본의 축적이 거의 없는 단순기능직은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여성 인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 출산 등으로 인적자본으로부터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짧다. 그러므로 인적자본형성의 동기, 즉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남성에 비하여 적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인적자본에 축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며,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높은 임금을 받게 되므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미루게 될 동기가 강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출산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위의 수식은 가장 간단한 형태인 인적자본형성 모형이나 현실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모형에서 T가 길수록 보다 많은 인적자본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할수록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유도도 강하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연령이 빠를수록, 기업과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인적자본형성이 원활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의 단순화된 모형에서는 임금은 매 期에 있어서 생산에 투입된 인적자본에 대한 보수로서 상정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기업은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의 임금의 합과 생산성의 합이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임금을 시간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지급할 수 있으며 위의 모형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직급에 따른 임금격차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질적인 인적자본만을 고려하였으나 인적자본의 내용에 있어서의 다양성 역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urphy(1986)는 인적자본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는데 인적자본의 특화와 관련하여 인적자본의 수요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인적자본의 特化(specialization)가 이루어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론은 교육 및 직업훈련체제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된다. 분업화(division of labor)와 전문화(specialization)가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중요한 결론 중의 하나이다. 종신고용제의 일본이나 직능별 노동시장이 발달한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이 가장 발달한 것은 안정적 직장 혹은 직능별 노동시장과에 의하여 형성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분업화 및 전문화가 커지고 따라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인적자본의 형성에 있어서의 각 개인의 고유한 능력과 선호의 차이 역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자발적 선별(self-selection)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교육 및 경제활동참가의 실증적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Willis and Rosen(1975) 참조).

위의 모형을 실제의 청년층의 진로결정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에는 단 하나의 인적자본 생산함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인적자본 생산함수(교육기회)가 존재하며 청년층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래의 임금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미래의 임금의 기대값(expected wages)을 대입하여 위의 최대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석 1) 이와 같은 일생(life cycle)에 걸친 인적자본의 축적을 다룬 모형으로는 Y. Ben-Porath(1967)와 J.J. Heckman(1976) 참조.

2. 經濟的 側面에서의 敎育의 機能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경제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학(특히 노동경제학)에서는 교육의 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현 교육제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 혹은 직업훈련제도의 경제적 기능에 대하여 경제학에서는 ① 인적자본의 형

성 ② 인력의 선별·배치¹⁾ ③ 다양한 기능인력의 공급 등 세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²⁾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본이론에서 교육은 인력의 생산성(productivity)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이해한다. 교육은 생산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따라서 교육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이해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앞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한다.

교육인력의 선별·배치의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에서는 교육이 인력의 생산성의 차이를 결과한다는 것보다는 각 개인은 고유한 생산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교육은 이러한 각 개인의 차이를 선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인구집단이 성실한 자와 나태한 자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성실한 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나태한 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급학교에의 진학여부는 각 기업으로 하여금 각 개인이 성실한 자인지 나태한 자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교육은 인력을 선별하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을 한다.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가 함축하는 바는 임금의 격차는 각 개인의 고유한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임금의 격차가 반드시 교육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기능인력의 공급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는 고정계수 생산함수(fixed coefficient production function)를 상정한 경제성장론에 그 방법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장론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각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여야 하며, 어떠한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隘路(bottle-neck)가 발생하게 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암묵적으로 각 타입의 인력 사이의 대체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의 교육에 대한 세 가지의 견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어느 한 가지의 견해가 교육의 기능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어떤 기능이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의 생산성에 대하여는 경험적·실증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

되고 있으며, 인력의 선별·배치기능도 역시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고, 다양한 인력의 상호간의 대체 탄력성은 제로도 아니며 또한 무한대도 아니다. 따라서 교육제도를 평가하고 그 개선책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교육 제도가 어느 기능에 충실하였으며, 현재의 교육제도가 어느 기능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교육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느 기능의 제고를 위한 개선책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1970년대 이전의 교육제도는 주로 인력의 선별·배치의 기능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같은 교과내용을 공부하였으며 그 학습결과에 따라 일류, 이류의 선별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 과거의 교육이 그 내용 면에서 부실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과거의 교육제도는 그 나름대로 교육의 선별기능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한정된 교육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교육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선별기능의 관점에서 1970년대의 인구증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교육수요의 팽창, 입시과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고교평준화시책을 평가하여 보면,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고교교육의 인력의 선별기능은 대학입시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입학 재수생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입시가 거의 유일한 인력의 선별기능을 담당하게 됨을 따라 교육의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는 극대화되었으며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교육, 재수를 통한 일류대학 입학에 대한 보상은 그만큼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졸업정원제에 의한 대학입학 정원증원의 경제적 효과를 이상의 교육의 경제적 기능에 비추어 평가한다면, 졸업정원제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30% 가량 증대시켰으므로 대학의 인력에 대한 선별적 기능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입(input)의 확대가 없이 피교육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각 개인의 생산성의 향상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수혜자인 대학생 각 개인에 있어서 대학정원의 증원은 대학교육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따르지 못한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에 인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인적자본형성의 양이 증가하

였을 것이나 각 개인에 있어서는 교육의 경제적 기능의 저하를 결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적 효과는 감소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후의 상급학교(대학원, 유학)에로의 진학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기능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국민 경제적 낭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199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있어서 사교육비는 총교육비의 54.7%에 달한다고 하며 이 중 상당부분은 순수한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라고 한다. 재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학벌(signal)을 갖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교육의 인력선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당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된다. 그러나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인적자본의 형성)이 없는 순수한 선별효과를 위한 투자이므로 순수한 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이다.

고정계수 생산함수를 상정한 경제성장이론은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훈련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제성장을 위하여는 교육제도가 경제의 외부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여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에서의 1970년대의 공업계 고등학교의 양성과 기술인력 공급정책은 이러한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인력부족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인력(manpower)의 관리보다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형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기보다는 정부는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수요에 따라 인적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설정되도록 제도를 형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거 국민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재수생 양산의 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의 단계는 정부가 청년층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적자본이 형성되고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단 소득정책으로서의 인력정책은 복지정책의 차원이므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주석 1)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K.J. Arrow,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62, pp.193~216.

A.M. Spence. *Market signaling informational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ing process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A.M. Spence, "Competition in salaries, credentials, and signaling prerequisites for job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6, pp.51~75

주석 2) R.B. Freeman(1986) 참조.

3. 勞動市場과 人的資本의 形成

마지막으로 인적자본형성의 제도, 즉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도와 노동시장간의 상호관계이다. 제 I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력은 인적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관행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으며 양자는 분리하여 고려될 수가 없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인적자본형성의 제도, 즉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의 설정을 위하여는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 및 관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구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분석까지 다루는 것은 본고의 연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간략하게나마 각국의 고유한 노동시장의 관행과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바는 선진각국에서 고유한 노동시장의 관행에 대하여 교육제도가 어떻게 이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분업화·전문화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적자본형성의 제도가 노동시장의 관행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하나의 예로써 미국 프로야구에서의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과거의 미국 야구에서는 농장제도(farm system)라고 하는, 각 구단에서 신인선수를 발굴하여 훈련시키고 각 구단은 이러한 선수를 타구단으로 이적시킬 때의 계약금으로 훈련에 대한 대가를 소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선수들도 처음에는 어느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프로야구에 입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 그러나 법령제도의 개편으로 자유계약제도(free agency system)가 도입되어 선수들이 스스로 훈련하여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자 우수한 선수들은 대거 프로야구 구단에서의 훈련으로부터 대학야구팀에서의 훈련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체내에서의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하여는 노동자와 사업체간의 제도적 혹은 문화적인 강한 연대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 미국의 고등교육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노동시장제도는 외부노동시장(external labor market)이 발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성인의 한 직장에서의 평균근속년수는 2.5년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경우 근로자와 직장간의 연계관계는 강하지 않다(이러한 수치는 1989년 일본의 12.4년, 한국의 4.0년에 비하여서도 매우 짧은 수준임). 또한 경기의 변화에 따른 layoff, recall과 같은 외부적 유연성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은 미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리적·문화적·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노동시장에 있어서 근로자와 직장간의 연계는 강하지 않고(중등교육에서의 실업계의 비중은 거의 없음), 교육에 있어서의 산학연계도 강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OJT)도 활발하지 않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저급인력의 경우는 사업장에서의 철저한 분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인적자본형성의 기회인 고등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제Ⅲ장의 제2절 고등교육현황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교육제도는 고등교육의 국민대중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2년제인 community college 등 한국의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단기고등 교육의 기회가 풍부하며, 대학원 교육과 같은 상급의 고등교육이 발달되어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높은 수준이어서 주립대학의 비중이 전체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교육비가 비싸며, 일반적으로 주립대학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시장 외부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인적자본의 소유권 역시 각 개인에게 소속된다. 각 개인의 고등교육의 과중한 수업료 부담에 대하여는 정부의 학자금 대여에 의하여 보완된다.

미국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학문의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학문에 대한 지원은 산업계의 프로젝트별로의 지원 이외에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재단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산업계의 지원이 부족한 기초과학과 같은 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 일본의 기업내 직업훈련

일본의 경우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중등 및 고등교육이 한국보다도 더 인문화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생산성이 있는 인적자본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중등교육은 직장에서 실시되는 인적자본형성에 대한 예비과정과 같은 인상을 준다. 전수학교와 같은 1년제의 중등교육 이후의 과정이 인문화된 중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각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예외적 이리 만큼 길고 직장이동시 타직장에서의 경력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근로자와 직장간의 연계를 타율적으로 강하게 하는 독특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분업화·전문화에 있어서 근로자와 개별 직장과의 연계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전문화(specialization)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와 직장간의 강한 연대는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의 축적을 기업 내에서의 직업훈련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임금구조가근속기간에 대하여 가파른 상승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이러한 임금구조는 제1절의 인적자본형성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 내에서의 훈련이 활발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나 직장이동에 대한 일종의 벌칙(penalty)과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인적자본의 소유권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업에 귀속된다고 하

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이러한 제도는 산업인력구조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

<표 II-1> 임금상승률 결정요인의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15~55세)

| (단위: %) | | | |
|---------|------|-------|------|
| | 한 국 | 일 본 | 미 국 |
| 경력(6년) | 3.10 | 2.25 | 1.91 |
| 근속(2년) | 5.03 | 3.86 | 3.98 |
| 교육(12년) | 8.96 | 15.63 | 6.27 |

자료 : 朴基性(1994) <표 5> 참조

가 있을 때 각 회사단위로 다변화를 하든가 아니면 정부는 무리를 하여서라도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다. 독일의 산학연계체제(dual system)

일본과 더불어 직업훈련체제가 가장 발달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은 일본과는 매우 다른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직능조합(Guild)에서 유래한 직능별 노동시장이 발달하여 인적자본의 형성은 이러한 직능별 노동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근로자와 사업체간의 개별적인 연대관계가 일본에서와 같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전문화는 직능별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그리고 노동력이 외부적 유연성은 직능별 기업간이라고 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중등교육의 경우, 산학연계체제에 의한 二元制度라고 하는 학교학습과 산업체에서의 직업교육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중적인 교육의 직업훈련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제Ⅲ 장 제1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등교육(고등학교)과정의 학생 중 남성의 67%, 여성의 57%가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전문화된 직업기술교육이 실시된다. 독일에서 이와 같은 연계체제가 성공적인 것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각 직능별의 공동우대와 같은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므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기업간의 인력 스카우트가 활발한 상태에서는 각 기업이 기업 외부의 노동력에 대한 직업훈련의 유인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직능별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개별적이지는 않으나 명확한 근로자와 직장간의 연계관계가 역사적·문화적 기반에 의하며 성립할 때에만 이러한 제도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직능별 노동시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급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독일의 고등교육제도 역시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은 널리 인정받고 있는 바와 같다.

라. 유럽의 전문대학

독일과 같은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 유럽의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에콜(ecole)과 같은 전문직업학교를 통한 기술인력의 양성이 활발하다.¹⁾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제국의 고등교육에서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프랑스의 경우는 18.5%), 한국에서도 최근(1994년)에는 고등교육 이수자 중 전문대 학생의 비중이 35%에 달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의 연계가 강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적자본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역사·사회적 배경이 없는 국가들에서 고수준의 인적자본형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중간형태의 고등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단선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는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10~12년간의 교육후) 실로 다양한 직업훈련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부표 참조).

주석1) 중앙일보 특별취재팀(1994, 206~214쪽) 및 제Ⅲ장 제2절의 <표 3-14> 참조.

Ⅲ. 靑年層 勞動力의 現況

제Ⅲ에서는 한국의 1980년대 이후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경험적 자료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의 경로는 서로 크게 다르므로 본 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을 엄격히 분리하여 고찰하며, 다양하게 제기되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제현상 중에서 실제로 경험적인 자료에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인 자료의 비교를 위하여 시계열(time series)적 비교와 국제간의 비교(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를 행한다. 1980년대의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상승에 따른 교육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그 근본원인임은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교육노동시장의 진입이라고 하는 연령층 효과(cohort effect)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80년대 초·중등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었으며, 초·중등교육의 확대에 따라 고등교육의 수준과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교육수준의 변화를 경험한 청년층 노동력이 기존의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 지를 제1절 초·중등교육, 제2절 고등교육, 제3절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은 제1절 초·중등교육부문에서 다룬다.

1. 初·中等教育

한 국가의 인적자원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구조와 초·중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지금까지 상당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은 많은 문헌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¹⁾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단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고도로 교육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풍부한 인적자원이 수입된 실물자본과 결합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인적자원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요컨대 지난 1974~75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경제가 노동의 무한공급시대로부터 탈피하여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시장력이 작용하게 되는 Lewis 전환점을 통과하였다면²⁾, 1989년경부터는 부문별 인력의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를 통하여 한국의 초·중등교육의 이수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여 국민대다수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반면에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장래의 한국 경제는 현재의 OECD 선진제국과 같이³⁾ 양적인 측면에서의 청년층의 인적자원이 고갈되어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생산성의 향상)에 의하여 양적인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부족이 지속적인 고속성장의 애로요인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초·중등교육에 있어서의 특징적 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98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초·중등교육의 대중화 추세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학교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976년을 정점으로 한(고교졸업 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1982년) 저연령층 인구의 절대적 감소의 현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인문화 현상, 즉 남성 중등교육 이수자에 있어서의 인문계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각각의 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초·중등교육의 대중화

1980년대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의 국민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였다. 각급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로 진학률로 보았을 때, 국민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1973~75년간 각각 70.4%, 74.8%, 76.8%에 불과하여 전국민의 4분의 3만이 중학교 과정에 진입하였으나, 1981~83년간은 각각 96.5%, 97.2%, 98.3%로 상승하여 초등교육은 1970년대를 통하여 대중화가 이

루어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도에는 국민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99.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학교 졸업생의 상급학교(고등학교)에로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70~80%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0년대를 통하여 급속히 신장되어 1990년에 90%대에 진입한 이후 1990~93년에는 각각 91.4%, 94.0%, 96.0%, 95.3%로 신장되어 중등교육의 대중화가 거의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1980년대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지적된다(표Ⅲ-1) 참조).

이러한 초·중등교육의 대중화의 진전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우선 중등교육의 대중화의 정도에 대한 객관

<표 Ⅲ-1> 초·중학교의 졸업생수 및 상급학교 진학률

(단위 : 천명, %)

| | 국민학교 졸업생수 | 진학률 | 중 학교 졸업생수 | 진학률 |
|------|--------------|------|--------------|------|
| 1965 | 618 | 54.3 | 190 | 69.1 |
| 1970 | 800 | 66.1 | 313 | 70.1 |
| 1975 | 925 | 77.2 | 569 | 74.7 |
| 1980 | 874 | 95.8 | 742 | 84.5 |
| 1985 | 940 | 99.2 | 856 | 90.7 |
| 1990 | 764 | 99.8 | 836 | 95.7 |
| 1991 | 754 | 99.8 | 775 | 97.5 |
| 1992 | 842 | 99.9 | 718 | 98.6 |
| 1993 | 834 | 99.9 | 744 | 98.1 |
| 1994 | 848 | 99.9 | 736 | 9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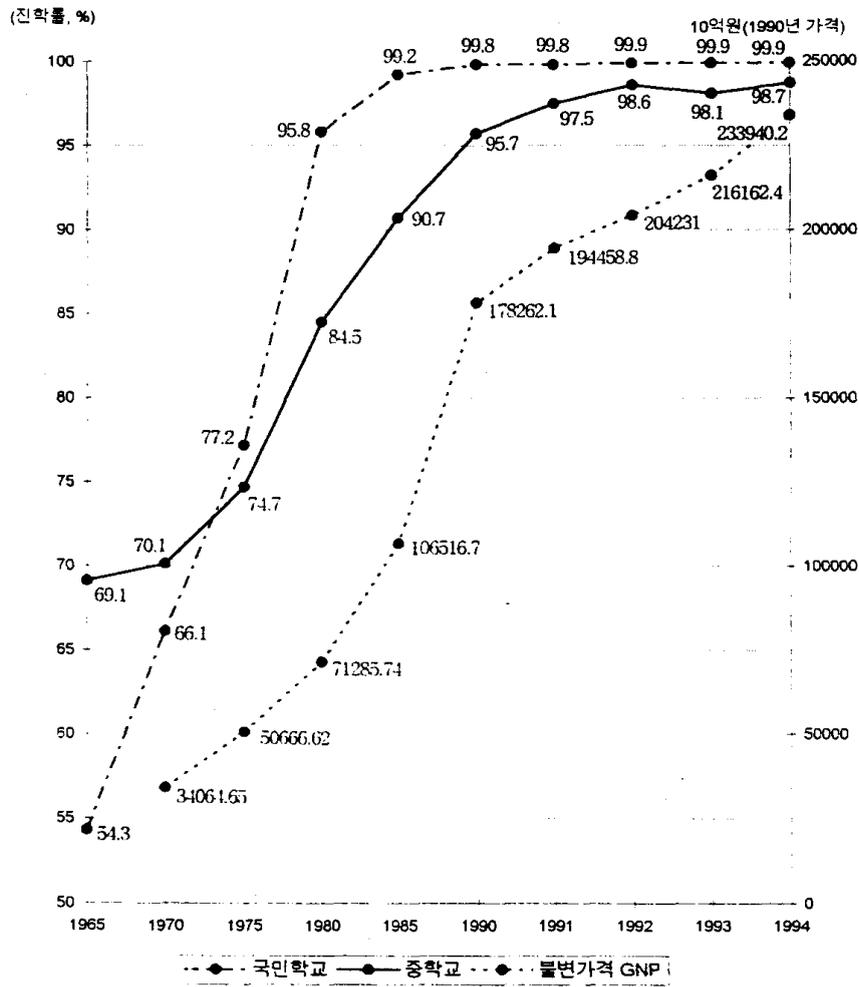
주 :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생 중 상급학교 진학생수/졸업생수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적인 국제적인 비교를 위하여 만17세 연령인구의 재학률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1986~87년에 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17세 연령인구의 중등교육기관의 재학률은 필자의 대략적인 추정에 의하면 76.2%였으며, 1992년에는 80.1%에 달하였다. 이는 당시의 OECD 22개국 중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다. 1986~87년의 한국의 17세 연령층의 재학률은 14번째의 높은 수준이며, 각 선진제국의 17세 연령층 인구의 교육기관의 재학률은 다음과 같다. 구서독(99%, 파트타임 포함), 일본(91%), 미국(89%), 벨기에(86%), 스위스(83%), 프랑스(80%), 캐나다(79%), 네덜란드(78%) 등이다(표 Ⅲ-2 참조). 물론 선진국의 경우는 중등교육의 기회비용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⁴⁾ 한국과 學制가 거의 유사한 일본의 중등교육 이수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1986~87년도 일본의 17세 연령층의 재학률은 91%)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대중화는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 진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사회제도의 일부이며 따라서 평면적 양적인 비교는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교육제도는 고유한 노동시장과 사회제도의 결과이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15~19세의 연령군의 중등교육 재학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재학률이 높은 국가들(이 연령군 인구의 재학률이 70% 이상인 국가들)로서, 그 중

[그림 Ⅲ-1] 상급학교 진학률과 불변 국민소득



<표 Ⅲ-2> OECD 국가의 17세 연령층 재학생의 연령층 인구에 대한 비율(1986~87)

(단위 : %)

| | 풀타임교육 | 파트타임교육 | 전 체 |
|------------------------|-------|------------------|------|
| 호주 ¹⁾ | 40 | 10 | 50 |
| 오스트리아 ²⁾ | 35 | 43 | 78 |
| 벨기에 | 82 | 5 | 86 |
| 캐나다 | 79 | - | 79 |
| 덴마크 | .. | .. | 75 |
| 핀란드 | 83 | .. | .. |
| 프랑스 | 69 | 10 | 80 |
| 서독 | 51 | 48 | 99 |
| 그리스 ³⁾ | 59 | .. | .. |
| 아일랜드 ⁴⁾ | 66 | .. | .. |
| 일본 ¹⁾ | 89 | 2 | 91 |
| 뉴질랜드 ⁵⁾ | 37 | 1 | 39 |
| 네덜란드 | 78 | - | 78 |
| 노르웨이 | 74 | 2 | 76 |
| 스페인 ¹⁾ | 53 | .. | .. |
| 스웨덴 | 83 | .. | .. |
| 스위스 | 27 | 56 | 83 |
| 터키 ¹⁾ | 32 | .. | .. |
| 영국 | 33 | 16 ³⁾ | 49 |
| 미국 | 89 | - | 89 |
| 구유고연방 | 66 | - | 66 |
| 한국 ⁶⁾ | 82.9 | - | 76.2 |
| 한국(1992) ⁵⁾ | 85.3 | - | 80.1 |

주 : -는 尠少, ..는 未詳을 각각 나타냄.

1) 고등교육은 제외한 수치임.

2) 1985~86년

3) 'The Youth Training Scheme' 포함

4) 1986~1987년도의 고등학교 과정(일반계, 실업계,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17세 학생수를 분자로 하고(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당해년도의 17세 인구의 추정치를 분모로 사용하였음(통계청, 『KOSIS』 자료).

5) 1992~93년도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17세의 학생수를 분자로 하고(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2), 17세 추정인구를 분자로 하여 추정하였음(통계청, 『KOSIS』 자료).

자료 : OECD(1990, 66쪽).

첫 번째 부류는 스위스와 독일계의 중등교육에서의 직업훈련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서 이 연령군의 거의 모든 인구가 재학생인 반면, 반수 가량은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도 파트타임의 비중이 보다 작기는 하나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류의 국가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예와 같이 학교 교육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서, 이 연령층의 재학률이 높고 파트타임의 비중이 작은 국가들이다. 이와 같은 국가들에는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가 포함되며, 일본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부류의 국가들은 재학률이 낮은 국가들로서 영국(55%), 뉴질랜드(50%), 호주, 스페인, 그리고 터키가 여기에 속한다.

나.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

초·중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초·중등교육 이수비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향후 한국의 청년 노동력의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이 주목된다.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1990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국민학교 졸업생수의 추이를 보면 1976년의 95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현재 국민학교 재학중에 있는 인구층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표 Ⅲ-3 참조). 현재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국

민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2000년의 고등학교 졸업생수는 80.6만명으로써 1994년의 73.6만명보다는 약간 많으나 현재의 국민학교 1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2006년에는 58.8만명으로 1994년의 고등학교 졸업생수에 비해 약 20%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현상의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의 저하이다. 그 원인은 <표 Ⅲ-17>의 비농가 20대 전반(20~2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명백히 나타난다. 1993~94년도의 6학년생은 1982년 출생이며 1학년생은 1988년 출생이다. 비농가 20~2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2년 54.1%에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63.5%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약 65%

<표 Ⅲ-3> 국민학교 재학생수(1993~94)

(단위 : 천명)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 619 | 623 | 648 | 652 | 741 | 816 |

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저연령층의 연령층 규모(cohort size)가 80만명대에서 60만명대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은 여성의 인적자본축적 욕구의 상승, 이에 따른 학력과 임금의 상승, 가사활동의 기회비용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므로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성장의 결과에 따른 장기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³⁾

한국의 이러한 인구구성은 아직은 OECD 국가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젊은 층에 속한다(표 Ⅲ-5 및 Ⅲ-6 참조). 한국의 인구구성은 현재로서는 생산연령층 인구가 두꺼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생산적인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Ⅲ-6>에서 보듯이 14세 이하의 저연령층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력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표 Ⅲ-4>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의 구조(1970~99)

(단위 : %)

|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1999 |
|-------|------|------|------|------|------|------|------|
| 0~4 | 14.1 | 12.9 | 10.6 | 9.4 | 7.7 | 7.4 | 7.3 |
| 5~9 | 14.4 | 12.7 | 11.7 | 9.7 | 8.9 | 7.3 | 7.1 |
| 10~14 | 14.1 | 13.0 | 11.7 | 11.0 | 9.2 | 8.5 | 7.0 |
| 15~19 | 10.1 | 12.3 | 11.9 | 10.8 | 10.4 | 8.8 | 8.6 |
| 20~24 | 8.0 | 8.7 | 10.7 | 10.5 | 10.0 | 9.9 | 8.4 |
| 25~29 | 7.2 | 7.2 | 8.1 | 10.0 | 10.0 | 9.5 | 9.7 |
| 30~34 | 6.9 | 6.4 | 6.6 | 7.6 | 9.6 | 9.5 | 8.9 |
| 35~39 | 5.8 | 6.3 | 6.0 | 6.3 | 7.0 | 9.0 | 9.2 |
| 40~44 | 4.6 | 5.2 | 5.7 | 5.5 | 5.8 | 6.6 | 8.4 |
| 45~49 | 3.2 | 3.4 | 3.5 | 4.1 | 4.8 | 4.7 | 4.9 |
| 50~54 | 2.6 | 2.6 | 3.0 | 3.1 | 3.7 | 4.3 | 4.4 |
| 55~59 | 2.0 | 2.0 | 2.2 | 2.5 | 2.7 | 3.3 | 3.8 |
| 60~64 | 1.3 | 1.5 | 1.6 | 1.7 | 2.1 | 2.3 | 2.7 |
| 70~74 | 1.0 | 0.9 | 1.1 | 1.2 | 1.4 | 1.7 | 1.8 |
| 75~79 | 0.7 | 1.0 | 0.6 | 0.8 | 0.9 | 1.0 | 1.2 |
| 80이상 | 0.0 | 0.0 | 0.5 | 0.5 | 0.6 | 0.7 | 0.8 |

자료 : 통계청, 「KOSIS」.

<표 Ⅲ-5> OECD 국가들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1986년 6월 기준)

(단위 : %)

| | 0~4세 | 5~14세 | 15~64세 | 65세 이상 |
|------|------|-------|--------|--------|
| 호 주 | 7.5 | 15.6 | 66.4 | 10.4 |
| 벨기에 | 6.0 | 12.6 | 67.4 | 14.1 |
| 캐나다 | 7.2 | 14.2 | 68.0 | 10.7 |
| 프랑스 | 6.8 | 14.2 | 65.9 | 13.2 |
| 독 일 | 4.9 | 10.0 | 70.1 | 15.1 |
| 이탈리아 | 5.3 | 14.0 | 67.8 | 12.9 |
| 일 본 | 6.1 | 15.0 | 68.4 | 10.5 |
| 스웨덴 | 5.7 | 12.3 | 64.5 | 17.5 |
| 스위스 | 5.4 | 11.6 | 68.4 | 14.7 |
| 영 국 | 6.4 | 12.6 | 65.7 | 15.3 |
| 미 국 | 7.5 | 14.0 | 66.4 | 12.1 |

자료 : OECD(1989,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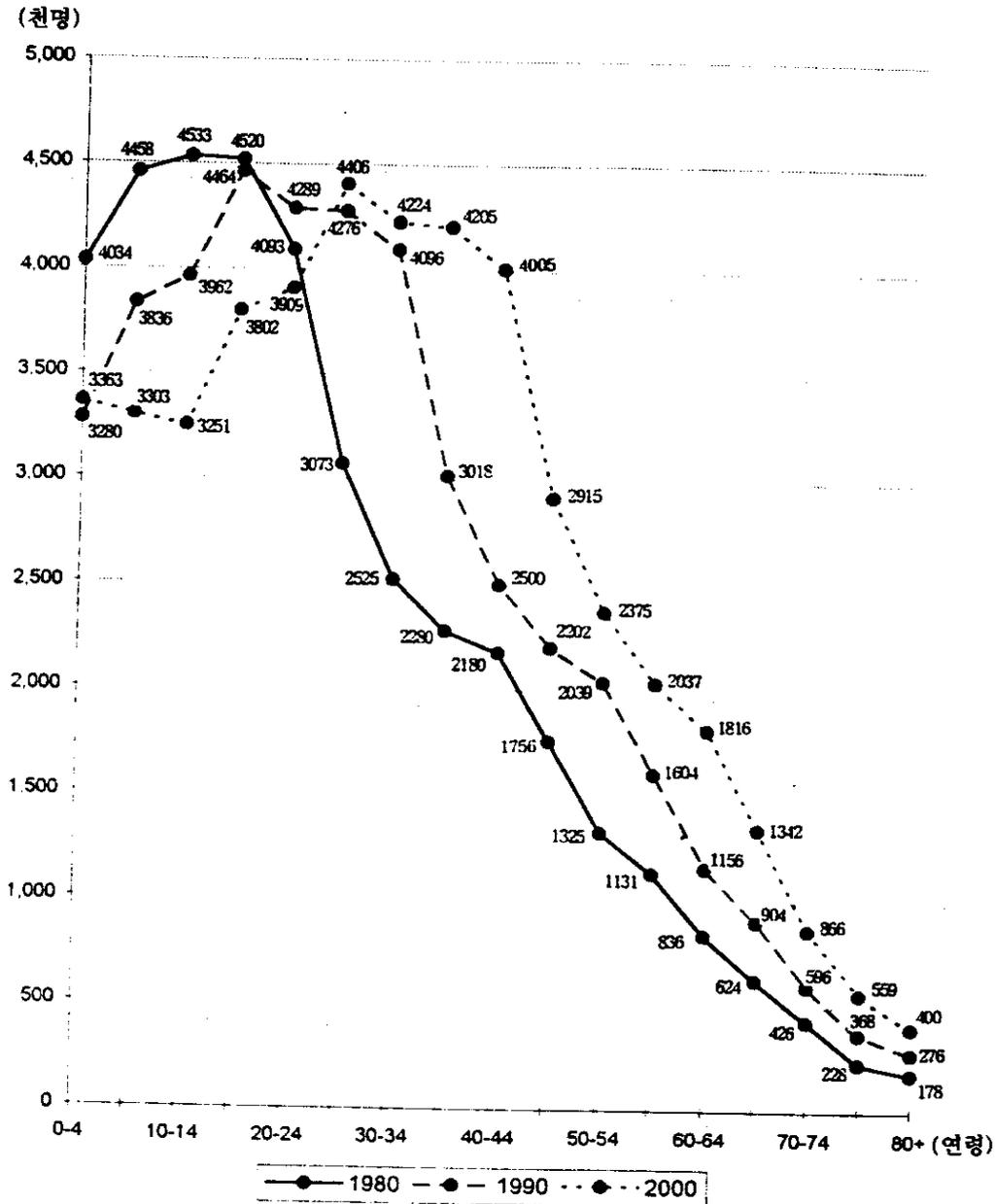
<표 Ⅲ-6>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1982~94)

(단위 : %)

| | 0~4세 | 5~14세 | 15~64세 | 65세 이상 |
|------|------|-------|--------|--------|
| 1982 | 10.4 | 22.4 | 63.2 | 4.0 |
| 1983 | 10.3 | 21.8 | 63.9 | 4.0 |
| 1984 | 9.9 | 21.3 | 64.7 | 4.1 |
| 1985 | 9.3 | 20.8 | 65.6 | 4.3 |
| 1986 | 9.0 | 20.4 | 66.3 | 4.4 |
| 1987 | 8.4 | 20.0 | 67.1 | 4.5 |
| 1988 | 7.9 | 19.0 | 68.4 | 4.7 |
| 1989 | 7.8 | 19.1 | 68.3 | 4.8 |
| 1990 | 7.7 | 18.2 | 69.1 | 5.0 |
| 1991 | 7.6 | 17.6 | 69.7 | 5.1 |
| 1992 | 7.6 | 17.2 | 70.1 | 5.2 |
| 1993 | 7.5 | 16.8 | 70.4 | 5.4 |
| 1994 | 7.4 | 16.4 | 70.7 | 5.5 |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Ⅲ-2] 한국의 인구구조(1980~99)



다. 중등교육의 인문화 현상

한국의 중등교육(고등학교)은 그 교과과정 면에서 일반계와 실업계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⁴⁾ 1980년대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남성의 중등교육 중 일반계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만 해도 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남성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1980년대에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전체 남성고교 졸업생수의 3분의 2 정도의 비율에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표 Ⅲ-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중등교육 이수자에 있어서의 일반계 대 실업계의 비율은 6대4정도의 비율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흔히 지적되는 바의 1980년대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수에 대한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는 '1980년대의 교육의 인문화 현상'은 남성에 국한된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졸업생의 절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일반계 졸업생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업

계 졸업생수는 1984년(14.9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4년은 11.4만명까지 하락하였음이 주목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고교 졸업자의 증가추세와 함께 실업계 졸업생수도 증가하여 1982년 10.6만명으로부터 1994년 14.1만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1980년대를 통하여 특히 남성 청년층 노동력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과거 1970년대의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상당수가 중학교 졸업후 실업계 고등학교-취업의 진로를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의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수가 인문계 고등학교-고등교육(대학 혹은 전문대)-취업의 진로를 선택하는 교육 기간의 연장, 혹은 달리 표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황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8 참조).

실업계 남자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계 졸업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 남성 실업계 고졸자의 취업률은 1983년의 36.3% 이래로 1986년의 48.2%, 1989년의 69.8% 등 그 졸업자수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반면 직학률은 1983년 21.2%로부터 1992년 10.2%까지 하향추세를

<표 Ⅲ-7> 교과과정별 고등학교 졸업생수의 추이(1984-94)

(단위 : 천명, %)

| | 남 자 | | | 여 자 | | |
|------|-----|-----|---------|-----|-----|---------|
| | 일반계 | 실업계 | 일반계의 비중 | 일반계 | 실업계 | 일반계의 비중 |
| 1981 | 159 | 130 | 55.2 | 120 | 89 | 57.5 |
| 1982 | 170 | 140 | 54.9 | 130 | 106 | 55.1 |
| 1983 | 180 | 146 | 55.1 | 137 | 117 | 54.0 |
| 1984 | 194 | 149 | 56.5 | 148 | 122 | 54.8 |
| 1985 | 205 | 148 | 58.2 | 161 | 129 | 55.5 |
| 1986 | 213 | 141 | 60.2 | 174 | 140 | 55.5 |
| 1987 | 232 | 139 | 62.5 | 180 | 132 | 57.7 |
| 1988 | 242 | 129 | 65.2 | 184 | 131 | 58.4 |
| 1989 | 253 | 129 | 66.3 | 198 | 131 | 60.1 |
| 1990 | 276 | 105 | 72.5 | 212 | 143 | 59.8 |
| 1991 | 271 | 128 | 67.9 | 212 | 144 | 59.4 |
| 1992 | 262 | 127 | 67.3 | 204 | 148 | 58.0 |
| 1993 | 252 | 125 | 66.8 | 198 | 148 | 57.2 |
| 1994 | 236 | 114 | 67.4 | 188 | 141 | 57.1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Ⅲ-8>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

(단위 : 천명, %)

| 연도 | 인문계 | | | | | 실업계 | | | | |
|------|------|------|------|------|------|------|------|------|------|------|
|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진학률 | 취업자수 | 취업률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진학률 | 취업자수 | 취업률 |
| 1983 | 180 | 101 | 56.1 | 7 | 3.9 | 146 | 31 | 21.2 | 53 | 36.3 |
| 1986 | 213 | 117 | 54.9 | 10 | 4.7 | 141 | 23 | 16.3 | 68 | 48.2 |
| 1989 | 253 | 122 | 48.2 | 17 | 6.7 | 129 | 15 | 11.6 | 90 | 69.8 |
| 1992 | 262 | 125 | 47.7 | 24 | 9.2 | 128 | 13 | 10.2 | 98 | 76.6 |
| 1994 | 236 | 148 | 62.7 | 20 | 8.5 | 114 | 21 | 18.4 | 82 | 71.9 |
| 연도 | 인문계 | | | | | 실업계 | | | | |
|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진학률 | 취업자수 | 취업률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진학률 | 취업자수 | 취업률 |
| 1983 | 137 | 77 | 56.2 | 14 | 10.2 | 117 | 14 | 12.0 | 61 | 52.1 |
| 1986 | 174 | 90 | 51.7 | 20 | 11.5 | 140 | 12 | 8.6 | 88 | 62.9 |
| 1989 | 197 | 103 | 52.3 | 29 | 14.7 | 131 | 10 | 7.6 | 104 | 79.4 |
| 1992 | 204 | 105 | 51.5 | 26 | 12.7 | 147 | 11 | 7.5 | 121 | 82.3 |
| 1994 | 188 | 124 | 66.0 | 18 | 9.6 | 141 | 18 | 12.8 | 110 | 78.0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보이다가 1994년 18.4%로 반등하고 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추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나 졸업생수에 있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계 고졸자의 낮은 취업률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직업훈련학교로서의 역할에서 성공적이지를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남성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이러한 실업교육의 실패에 따라 청년층의 진로선택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에 있어서는 감소추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업계 중에서도 그 교과과정의 내용별로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1980년대에 하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졸업자수 역시 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경쟁률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경쟁률은 1979년 2.3 대 1, 1980년 2.0 대 1의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1.4~1.5대 1, 1990년대에 들어서는 1.3대 1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 즉 중등교육의 인문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다른 청년층의 선택의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수요패턴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응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입학생수의 감소추이는 청년층이 진로선택에 있어서 이에 대응하여 상급교육을 수요한 결과임이 드러난다. 이는 남성 공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생수의 감소현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나 여성 실업계 졸업생의 감소추세는 없었다고 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적내용 면에 있어서의 개선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구성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가 요청됨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일반계 교육의 비중을 타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9 참조). 우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중등교육 이수학생들이 일반계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타 국가들은 크게 보아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으로 호주,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남자 67.6%, 여자 73.0%),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벨기에의 49%로부터 아일랜드의 73%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남자 32.5%, 여자 45.8%),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유고 등의 국가들로서 오스트리아의 39%로부터 스웨덴의 78%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의 학생들이 풀타임의 실업계 교육을 받고 있다. 마지막 그룹으로 독일(남자 18.9%, 여자 21.7%)과 오스트리아의 경우로서 파트타임 학생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 일본

<표 Ⅲ-9> OECD 국가의 중등교육과정 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 구성비(1986~87)

(단위 : %)

| | 남 자 | | | 여 자 | | |
|-------------------|------|-------|------|------|-------|------|
| | 풀타임 | 실업계비중 | 파트타임 | 풀타임 | 실업계비중 | 파트타임 |
| 호 주 | 71.2 | - | 28.8 | 95.3 | - | 4.7 |
| 오스트리아 | 21.4 | 33.0 | 45.7 | 23.8 | 46.7 | 29.5 |
| 벨기에 | 48.3 | 43.3 | 8.4 | 49.6 | 38.9 | 11.6 |
| 덴마크 | 25.0 | 75.0 | .. | 37.4 | 62.6 | .. |
| 핀란드 | 36.1 | 63.9 | - | 45.1 | 54.9 | - |
| 프랑스 | 32.5 | 53.8 | 13.7 | 45.8 | 48.5 | 5.7 |
| 독 일 | 18.9 | 14.3 | 66.8 | 21.7 | 21.3 | 56.9 |
| 그리스 | 61.5 | 38.5 | - | 82.7 | 17.3 | - |
| 아일랜드 | 70.1 | 11.6 | 18.3 | 75.0 | 20.2 | 4.8 |
| 일 본 | 67.6 | 28.8 | 3.5 | 73.0 | 25.3 | 1.8 |
| 룩셈부르크 | 20.6 | 55.5 | 23.9 | 29.7 | 53.6 | 16.7 |
| 네덜란드 | 41.9 | 58.1 | - | 47.6 | 52.4 | - |
| 뉴질랜드 | 66.3 | 0.5 | 33.1 | 73.7 | 2.6 | 23.6 |
| 노르웨이 | 38.0 | 55.4 | 6.6 | 45.5 | 51.3 | 3.2 |
| 스페인 | 52.8 | 47.1 | - | 57.6 | 42.4 | - |
| 스웨덴 | 15.9 | 84.1 | - | 27.7 | 72.3 | - |
| 스위스 | 17.8 | 6.9 | 75.3 | 23.6 | 16.6 | 59.8 |
| 터 키 | 52.3 | 47.7 | - | 67.8 | 32.2 | - |
| 영 국 | 55.6 | 9.9 | 34.5 | 50.7 | 11.0 | 38.2 |
| 유 고 | 35.9 | 64.1 | - | 37.7 | 62.3 | - |
| 한 국 ¹⁾ | | 38.5 | | | 42.3 | |
| 한 국 ²⁾ | | 32.6 | | | 42.9 | |

주 : -는 尠少, ..는 未詳을 각각 나타냄. 실업계 비중은 풀타임 학생 중 실업계 학생의 비중을 의미함.

1) 1986~87년.

2) 1992~93년.

자료 : OECD(1989, 36쪽).

의 고교 학생수의 구성에 있어서 파트타임의 비중이 남자 3.5%, 여자 1.8%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일반계의 비중이 1994년 졸업생의 경우 남자 67.4%, 여자 57.1%에 이르러 일반계 교육의 비중이 높은 첫 번째의 부류에 속한다고 하겠다.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해 실업계 교육의 비중이 현재로서는 높으며, 이는 향후 중등교육의 교과내용별 개편의 방향과 이에 따른 고교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석 1) 배무기(1993, 165~191쪽) 참조.

주석 2) 배무기(1993), 제10장 한국경제의 전환점 참조.

주석 3) OECD(1990) 참조.

주석 4) 여기에서의 기회비용은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소득을 의미한다.

주석 5) Becker(1981) 참조.

주석 6) 일반계 중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졸업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실업계 교육에는 농·공·상·수산 및 해양계, 종합고등학교 등 졸업후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을 의미한다.

2. 高等教育

한국의 청년층 노동력의 고등교육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1980년의 '대학 졸업정원제'의 실시라고 하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정책의 단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계 고교의 졸업생을 잠재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로 보았을 때, 일반계 고교의 졸업생수는 남녀 통틀어 1979년 32.4만, 1980년 32.4만, 1981년 36.7만명으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반면에 대학입학 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인 1979년의 입학생수로 본 대학입학 정원은 대학(교) 9.9만명, 전문대 7.3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표 Ⅲ-10>은 1980년의 대학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실시되게 된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당해년도 진학률은 26~27%에 그치고 있었으며, 재수율로 나타

<표 Ⅲ-10>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추이(1979~94)

| (단위 : 천명, %) | | | |
|--------------|------|------|------|
| | 고졸자수 | 진학률 | 재수율 |
| 1979 | 410 | 25.9 | 0.57 |
| 1980 | 467 | 27.2 | 0.59 |
| 1981 | 497 | 35.3 | 0.68 |
| 1982 | 546 | 37.7 | 0.46 |
| 1983 | 579 | 38.3 | 0.39 |
| 1984 | 611 | 37.8 | 0.37 |
| 1985 | 642 | 36.4 | 0.36 |
| 1986 | 668 | 36.4 | 0.31 |
| 1987 | 683 | 36.7 | 0.26 |
| 1988 | 686 | 35.0 | 0.27 |
| 1989 | 710 | 35.2 | 0.26 |
| 1990 | 762 | 33.2 | 0.35 |
| 1991 | 754 | 33.2 | 0.38 |
| 1992 | 740 | 34.3 | 0.48 |
| 1993 | 722 | 38.4 | 0.44 |
| 1994 | 688 | 45.3 | 0.39 |

주 :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비율, 재수율은 상급학교 입학자 중 당해년도 졸업자를 1로 하였을 때 재수자의 비율.

자료 : 통계청, 「KOSIS」.

나는 대입자 중 당해년도 졸업생에 대한 재수생의 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입학의 과열경쟁과 이로 인한 재수생수의 증가라는 국가적 자원 낭비를 잘 나타내 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제'라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대학(교)의 입학생수는 1979년 9.9만명으로부터 1980년 11.6만명, 1981년 18.0만명으로 확대되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3년에는 23.2만명(남자 14.0만명, 여자 9.1만명)에 달하였다.

1980년대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정책의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난다. 여성의 경우는 대학생수에 있어서 뚜렷한 증가가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대학생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1983년과 1992년의 청년층 노동시장을 비교해 보면, 여성 노동력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의 양적인 축소가 거의 없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있었던 데에 비하여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가 별로 없이 교육에 대한 수요의 확대도 경제활동의 수준은 저하되었으므로 남성 청년층 노동시장은 오히려 악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980년대의 대학정원 증원정책은 남성 노동시장보다는 여성 노동시장에 기여한 바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고등교육 이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문사회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이 주목된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의 구성에 있어서는 초전문대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일본보다는 미국, 프랑스에 오히려 가까운 구성을 지니고 있음이 파악된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80년대의 고등교육 추이

1980년대의 대학입학 정원의 증원의 효과를 좀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대학교 입학생수의 추이를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대학입학 정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입학생수가 크게 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반면 여성은 1980년 이후 대학입학생수가 꾸준히 늘어나 1993년의 대학입학생수는 9.1만명으로 1980년의 4.8만명에 비하여 2배에 달한다(표 Ⅲ-11 및 그림 Ⅲ-3 참조). 결국 1980년대의 대학입학 정원의 확대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남성 청년층 노동력보다는 여성 청년층 노동력에 기여한 바가 보다 많았음이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써 대학(교) 입학생 중 재수생의 수를 살펴보면 1981년의 4.6만명으로부터 1993년의 4.2만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1980년대 초반의 여성 대학생수의 증가, 1980년대 중반부터의 20대 전반 여성의 경

<표 Ⅲ-11> 연도별·성별 고등교육기간의 입학생수와 그 구성

(단위 : 천명)

• 남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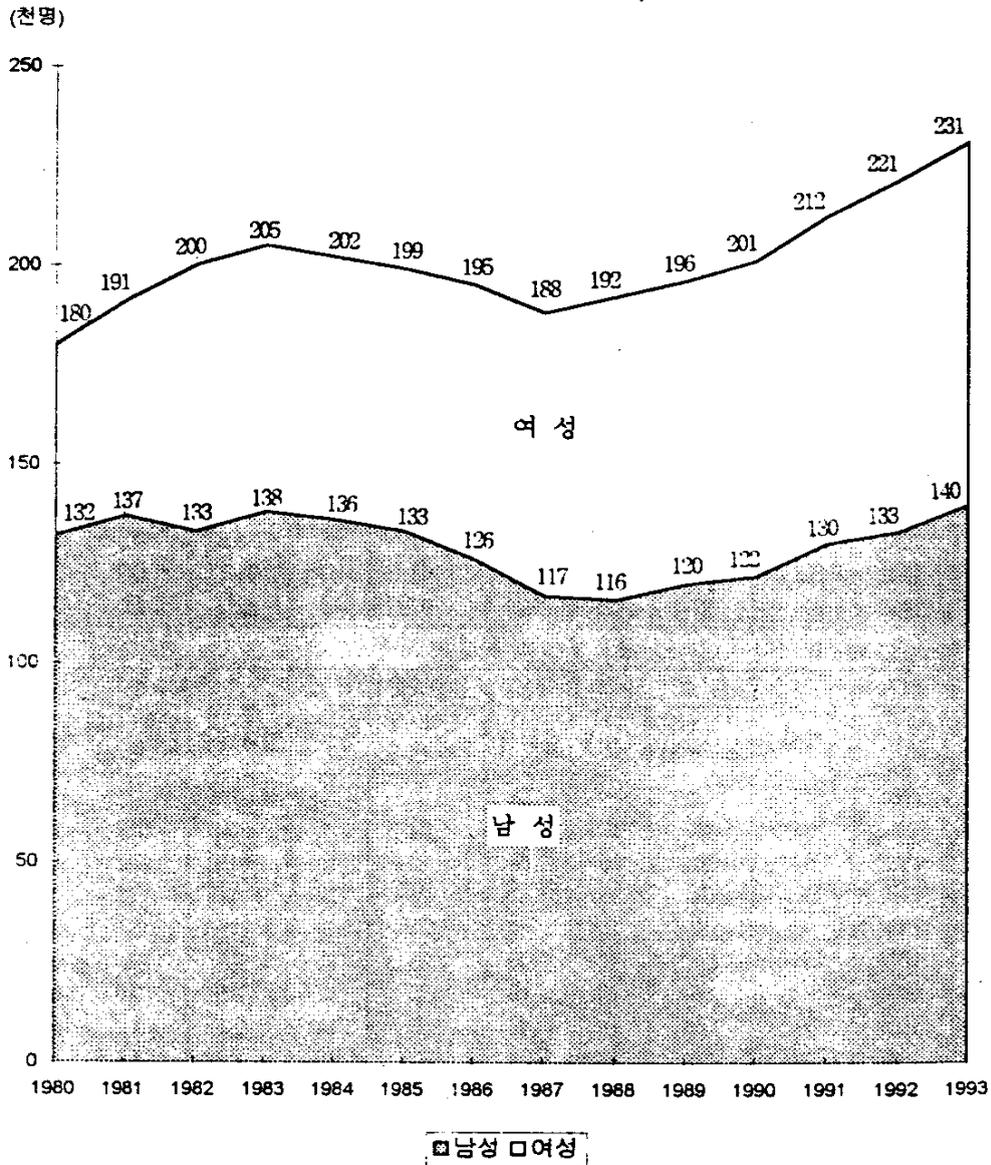
| | 대학(교) | | | 전문대학 | | | 교육대학 | | |
|------|-------|-------------|-----|------|-------------|-----|------|-------------|-----|
| | 입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재수생 | 입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재수생 | 입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재수생 |
| 1980 | 132 | | | 76 | | | 0.9 | | |
| 1981 | 137 | 88 | 46 | 65 | 41 | 23 | 4.5 | 3.3 | 0.9 |
| 1982 | 133 | 81 | 50 | 63 | 38 | 22 | 3.3 | 2.3 | 0.9 |
| 1983 | 138 | 79 | 54 | 64 | 39 | 23 | 1.8 | 1.2 | 0.6 |
| 1984 | 136 | 76 | 57 | 64 | 38 | 25 | 0.7 | 0.5 | 0.2 |
| 1985 | 133 | 81 | 49 | 64 | 38 | 25 | 1.5 | 0.6 | 0.8 |
| 1986 | 126 | 82 | 41 | 63 | 39 | 23 | 1.6 | 0.8 | 0.5 |
| 1987 | 117 | 76 | 38 | 60 | 33 | 24 | 1.6 | 0.7 | 0.6 |
| 1988 | 116 | 72 | 42 | 61 | 33 | 26 | 1.1 | 0.7 | 0.4 |
| 1989 | 120 | 73 | 46 | 71 | 35 | 34 | 0.8 | 0.5 | 0.3 |
| 1990 | 122 | 74 | 48 | 76 | 33 | 41 | 0.9 | 0.6 | 0.3 |
| 1991 | 130 | 79 | 49 | 85 | 37 | 46 | 0.8 | 0.5 | 0.3 |
| 1992 | 133 | 87 | 45 | 93 | 43 | 47 | 1.1 | 0.8 | 0.3 |
| 1993 | 140 | 97 | 42 | 103 | 57 | 43 | 1.4 | 1.0 | 0.3 |

• 여 성

| | 대학(교) | | | 전문대학 | | | 교육대학 | | |
|------|-------|-------------|-----|------|-------------|-----|------|-------------|-----|
| | 입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재수생 | 입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재수생 | 입학생수 | 당해년도 졸업자 | 재수생 |
| 1980 | 48 | | | 31 | | | 4.6 | | |
| 1981 | 54 | 42 | 12 | 33 | 24 | 9 | 14.2 | 12.2 | 1.7 |
| 1982 | 67 | 51 | 16 | 38 | 26 | 11 | 8.8 | 7.2 | 1.2 |
| 1983 | 67 | 51 | 15 | 41 | 28 | 12 | 6.1 | 5.2 | 0.9 |
| 1984 | 66 | 49 | 16 | 44 | 31 | 13 | 2.5 | 2.1 | 0.3 |
| 1985 | 66 | 52 | 14 | 46 | 33 | 13 | 2.7 | 2.0 | 0.4 |
| 1986 | 69 | 55 | 13 | 48 | 35 | 12 | 2.6 | 2.0 | 0.3 |
| 1987 | 71 | 56 | 14 | 48 | 33 | 14 | 2.7 | 1.7 | 0.5 |
| 1988 | 76 | 58 | 18 | 54 | 37 | 16 | 2.2 | 1.6 | 0.5 |
| 1989 | 76 | 58 | 18 | 60 | 39 | 21 | 2.4 | 1.6 | 0.8 |
| 1990 | 79 | 59 | 20 | 65 | 38 | 26 | 3.0 | 2.3 | 0.7 |
| 1991 | 82 | 61 | 21 | 74 | 41 | 32 | 3.1 | 2.6 | 0.5 |
| 1992 | 88 | 67 | 20 | 82 | 47 | 35 | 3.2 | 2.8 | 0.4 |
| 1993 | 91 | 72 | 18 | 95 | 59 | 34 | 3.6 | 3.2 | 0.4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Ⅲ-3] 대학교 입학생수의 추이(남성 및 여성)



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출산율의 감소 등 여러 현상에 대한 일치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입학생수는 특히 1989년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그 입학생수는 1980년의 7.9만명으로부터 1980년 8.1만명, 1981년 11.5만명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는 19.7만명(남자 5.7만명, 여자 5.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의 전문대학은 재수생의 상당수를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당해연도 졸업생의 경우는 입학생수에 있어서 대학과 전문대학이 2 대 1의 비율인데 반하여, 재수생의 경우는 거의 1 대 1의 비율에 달한다. 여성의 경우도 전문대학의 입학생수는 1990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였는데 재수생의 경우 전문대학이 대학(교)의 2배에 달하여 전문대학이 재수생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의 입학생수는 1981~82년의 급증 이후 3.5천명~5천명의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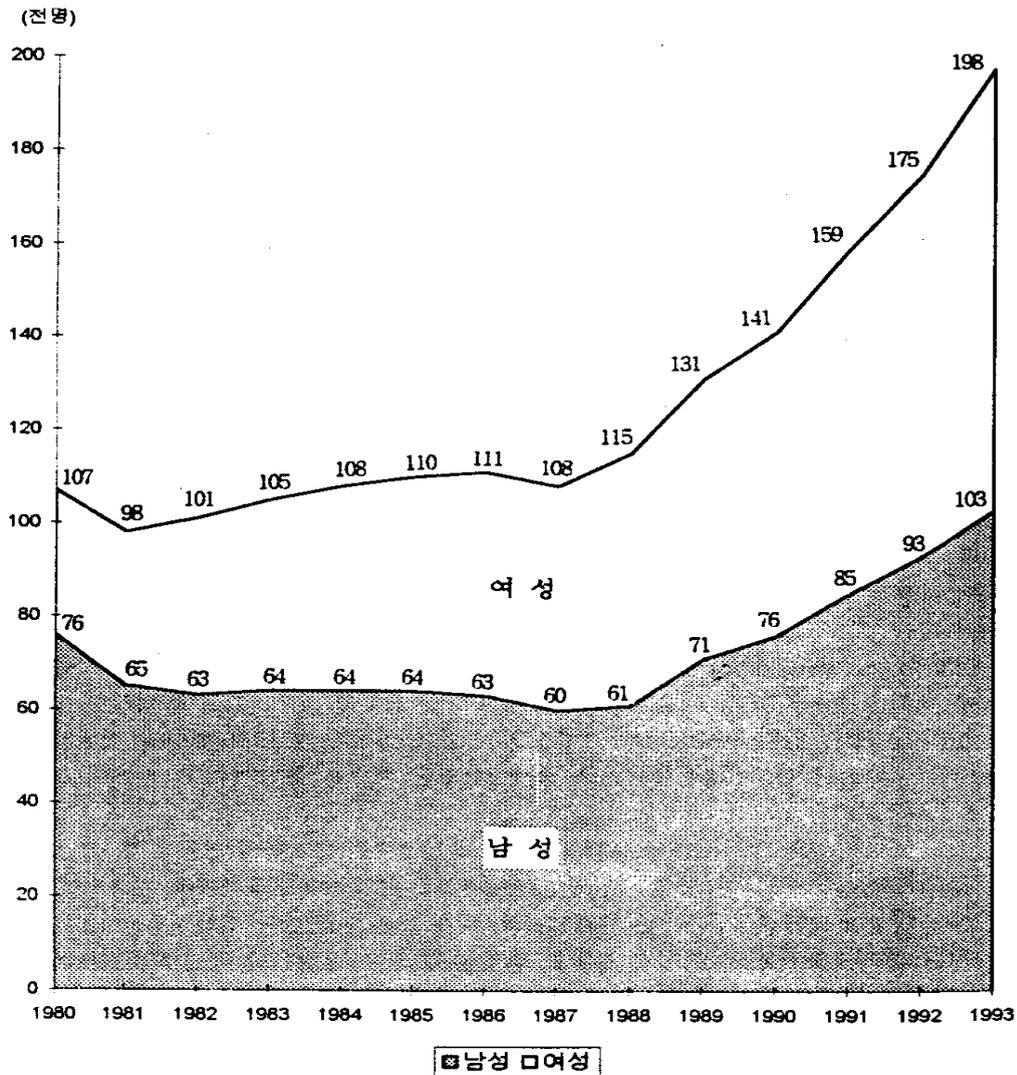
한국의 고등교육의 현황의 파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재수생의 문제인데 재수생은 그 위상 자체가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남성의 경우 1992년의 고교 졸업생수는 39.0만명(인문계 대 실업계 = 26.2 대 12.8)이며, 이 중 동년도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생은 13.1만명이었다. 따라서 33.6%가 당해연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92년의 경우 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1%였으므로 고등기관에 재학중이 아닌 자는 '再修'라는 일종의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의 고등교육기간 입학자 중 재수생은 8.8만명이었으므로 재수생의 상당수는 다음 해에 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흡수되었다. 이를 1983년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고교 졸업생수는 32.6만명이었으며 입학생수는 11.8만명(36.2%) 이었고, 1983년의 1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5%였다. 비경제 활동인구 중 8.2만명은 재수를 통하여 1984년 고등교육에 흡수되었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2년의 고교 졸업생수는 35.1만명(인문계 대 실업계 = 20.4 대 14.7)이었고, 이 중 11.7만명(33.3%)은 동년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으며, 1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였다. 재수생 중 1993년의 입학생수는 5.5만명이었다. 1983년에는 25.4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8.4만명(33.1%)이 진학하였으며, 2.9만명이 다음해에 입학하였고, 1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3%였다.

그러므로 1980년대의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정책은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의 욕구에 의하여 상당부분 흡수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제고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교육기회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인문사회계 중심의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와도

[그림 Ⅲ-4] 전문대학 입학생수의 추이(남성 및 여성)



<표 Ⅲ-12> 전공별 대학(교) 졸업생수(1980~94)

(단위 : 천명)

| | 상경계 | 법학계 | 기타인문사회계 | 이학계 | 공학계 | 의약계 |
|------|------|-----|---------|------|------|-----|
| 1980 | 4.7 | 1.4 | 9.2 | 4.7 | 11.3 | 3.5 |
| 1981 | 5.3 | 1.6 | 9.4 | 5.0 | 13.6 | 3.5 |
| 1982 | 6.1 | 1.7 | 11.2 | 6.0 | 14.7 | 4.0 |
| 1983 | 8.6 | 1.8 | 14.0 | 6.8 | 20.6 | 3.9 |
| 1984 | 10.7 | 2.7 | 19.8 | 8.2 | 21.9 | 4.1 |
| 1985 | 14.2 | 3.2 | 28.8 | 12.6 | 23.4 | 4.7 |
| 1986 | 17.7 | 3.4 | 34.5 | 14.3 | 28.0 | 5.3 |
| 1987 | 19.3 | 4.0 | 40.5 | 15.0 | 27.8 | 6.4 |
| 1988 | 21.6 | 5.0 | 45.3 | 11.7 | 29.0 | 6.7 |
| 1989 | 22.6 | 5.1 | 45.8 | 12.7 | 30.3 | 7.0 |
| 1990 | 22.1 | 5.1 | 46.4 | 13.1 | 30.5 | 6.8 |
| 1991 | 23.4 | 5.5 | 50.2 | 14.3 | 33.0 | 6.7 |
| 1992 | 23.1 | 5.7 | 49.8 | 20.1 | 32.0 | 6.7 |
| 1993 | 22.6 | 5.9 | 51.6 | 21.0 | 34.6 | 7.1 |
| 1994 | 21.7 | 5.5 | 48.7 | 20.5 | 34.3 | 6.8 |

주 : 상경계는 사회계 중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무역학과, 보험경영학과, 법학계는 사회계 중 공법학과, 법학과, 사법학과, 기타 인문사회계는 인문계와 사회계(상경계, 법학계 제외)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Ⅲ-13> 공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수 및 비중추이(1982~94)

(단위 : 천명, %)

| | 1982 | 1985 | 1987 | 1990 | 1992 | 1994 |
|---------|------|------|------|------|------|------|
| 대학(교) | 11.7 | 23.4 | 27.8 | 30.5 | 31.9 | 34.3 |
| 전개열중 비중 | 23.5 | 27.3 | 18.6 | 18.4 | 17.9 | 19.1 |
| 전문대학 | 29.0 | 27.5 | 28.8 | 28.3 | 36.2 | 46.6 |
| 전개열중 비중 | 50.1 | 37.2 | 34.8 | 32.5 | 34.0 | 36.3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1980년대의 대학교육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여성 대학졸업생의 증가는 4~6년의 시차를 두고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는 뒤의 <표 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대학졸업생수는 1989년 이후 거의 일정한 데 비해 여성 대학(교) 졸업생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남성 인구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1988년 이후 확대된 전문대학의 증원에 의하여 상당수 흡수되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요약하면, 1980년대의 남성 청년층 노동시장은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1992년에는 1983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대학생수에 있어서도 증가가 없었고 다만 전문대생의 수에 있어서 약 3만명의 증가가 있었을 따름이다. 이에 비해 재수생수는 오히려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1990년대 이후의 전문대학의 증가로 상당수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추가적인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

으며 기존의 재수생의 상당수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의 41.5%로부터 1992년의 29.1%로 감소하게 되었는데 연령층 규모의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고등교육 이수학생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남성 청년층 노동시장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이수학생수에 있어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1992년의 경우 1983년에 비하여 대학생수는 2만명, 전문대생의 수는 3만명의 증가가 있었다. 이 기간동안 1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뚜렷한 하락은 없었으므로 여성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양적인 축소가 없이 인적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질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부터의 20대 전반 여성층의 경제활동참여의 상승으로 연결되게 된다. 남성 청년층 노동시장의 개선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특히 남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공별 구성

고등교육의 전공별(계열별)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대학졸업생 중에서 법학계, 상경계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음이 나타난다(표 Ⅲ-14 참조). 이러한 현상은 1980년의 졸업정원제의 실시하고 하는 대학입학인원 확대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보여준다. 고등교육의 수요의 급속한 팽창에 대하여 단순한 고등교육 기회확대라고 하는 정책으로서 대응한 결과 비교적 피교육인원의 확대가 용이한 인문사회계의 정원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문사회계 졸업생의 비중이 공학계의 비중을 추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졸업정원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1년 졸업생의 인문사회계 대 공학계의 비율이 0.7 대 1 인 반면 1994년 졸업생의 경우는 1.4대 1의 비율로 그 비율이 정확히 역전되었다. 수적으로는 1980년 인문사회 대 이학 대 공학의 비율이 9.2만명 대 4.7만명 대 11.3만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49만명 대 21만명 대 34만명으로 그 구성비가 변화

<표 Ⅲ-14> 한국과 OECD 국가의 고등교육과정 재학생의 비율(1986~87)

| | (단위: %) | | | | | |
|-------|---------|------|------|------|--------|------|
| | 전문대학 | | 대 학 | | 대학원 | |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호 주 | 22.8 | 30.0 | 68.0 | 65.0 | 9.2 | 5.0 |
| 오스트리아 | 3.6 | 10.2 | 91.8 | 87.5 | 4.6 | 2.3 |
| 벨기에 | 37.3 | 54.7 | 62.7 | 45.3 | 대학에 포함 | |
| 캐나다 | 26.3 | | 66.3 | | 7.5 | |
| 덴마크 | 13.3 | 31.6 | 86.7 | 68.4 | 대학에 포함 | |
| 핀란드 | 30.5 | 27.4 | 62.1 | 67.4 | 7.4 | 5.2 |
| 프랑스 | 18.5 | 16.2 | 66.0 | 74.1 | 15.5 | 9.6 |
| 독 일 | 8.3 | 20.9 | 91.7 | 79.1 | 대학에 포함 | |
| 그리스 | 40.5 | 42.2 | 59.5 | 57.7 | 대학에 포함 | |
| 아일랜드 | 34.9 | 30.8 | 58.3 | 61.3 | 6.8 | 7.9 |
| 일 본 | 2.2 | 3.1 | 92.7 | 94.0 | 5.1 | 2.9 |
| 룩셈부르크 | 4.1 | 42.6 | 91.8 | 56.2 | 4.1 | 1.1 |
| 네덜란드 | 51.3 | 59.6 | 48.7 | 40.3 | 대학에 포함 | |
| 뉴질랜드 | 49.4 | 43.4 | 43.1 | 50.4 | 7.5 | 6.2 |
| 노르웨이 | 49.4 | 49.4 | 20.5 | 30.1 | 30.1 | 20.5 |
| 포르투갈 | 7.5 | | 90.3 | | 2.1 | |
| 스페인 | 0.0 | 0.0 | 96.0 | 97.6 | 4.0 | 2.4 |
| 스웨덴 | 50.9 | 64.6 | 39.1 | 31.7 | 9.4 | 3.7 |
| 스위스 | 36.5 | 27.1 | 52.7 | 64.1 | 10.7 | 8.8 |
| 영 국 | 32.1 | 39.0 | 53.8 | 52.2 | 14.1 | 8.8 |
| 미 국 | 28.8 | 33.1 | 84.2 | 48.8 | 20.3 | 18.1 |
| 터 키 | 11.2 | 10.8 | 83.6 | 84.5 | 4.6 | 4.7 |
| 유 고 | 16.4 | 16.5 | 83.6 | 83.5 | 대학에 포함 | |
| 한 국 | 35.2 | 34.5 | 57.5 | 60.3 | 7.4 | 5.2 |

주 : 한국은 1993~94년.

자료 : OECD(1989, 36쪽), 한국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4.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 중 여성의 비율의 증가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구성비의 추이를 공학계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따라 1982~94년의 그 절대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그 구성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표 Ⅲ-15 참조). 공학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나 고등교육의 인문화 경향은 1980년대의 뚜렷한 추세로 파악된다.

<표 Ⅲ-15> OECD 국가의 20~24세 연령의 재학률(1986~87)

(단위 : %)

|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 전 체 |
|------|------|-------|-----|------|
| | | 초·전문대 | 대학교 | |
| 호 주 | .. | 12.1 | - | .. |
| 벨기에 | 9.4 | 14.1 | 1.4 | 24.9 |
| 캐나다 | 1.4 | 15.9 | 3.0 | 20.3 |
| 덴마크 | 12.4 | 13.9 | - | 26.4 |
| 핀란드 | 9.4 | 11.2 | .. | 20.6 |
| 프랑스 | 1.1 | 14.6 | - | 15.7 |
| 독 일 | 10.0 | 14.1 | 0.2 | 24.3 |
| 그리스 | 2.3 | 13.2 | - | 15.5 |
| 아일랜드 | 0.5 | 4.6 | .. | 5.1 |
| 네덜란드 | 4.9 | 13.8 | 0.7 | 19.4 |
| 뉴질랜드 | 0.1 | 6.9 | 3.5 | 10.5 |
| 노르웨이 | 7.8 | 13.5 | 1.8 | 23.1 |
| 스웨덴 | 0.1 | 11.3 | - | 11.4 |
| 스위스 | 8.3 | 10.0 | 0.7 | 19.0 |
| 영 국 | 5.1 | 6.3 | 2.9 | 14.3 |
| 미 국 | 0.5 | 17.8 | 5.1 | 23.5 |
| 유 고 | 7.2 | 9.7 | 2.2 | 19.1 |

주 : -는 微少, ..는 未詳을 각각 나타냄.

자료 : OECD(1989, 37쪽).

다. 국제간 비교

한국의 고등교육 현황의 국제간 비교를 위하여 두 가지의 지수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20~24세 연령군에 있어서의 재학생의 비율이며,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 재학생의 구성비를 들 수 있다. 우선 20~24세 연령층에 있어서의 재학생의 비율을 보면 한국의 1992년 이 연령군의 통학생(비경제 활동 중 '통학')의 비율은 29.1%(남자 39.6%, 여자 21.6%)이었다.¹⁾ 고용구조 조사에 있어서 입대자는 아예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수치는 해당연령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는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²⁾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시 1986~87년의 OECD 국가들 중 미국(23.5%)과 캐나다(20.3%)는 이 연령군의 재학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교육과정에 있다. 반면 독일,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역시 20% 이상의 높은 재학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중등교육, 특히 파트타임과정의 학생이 이들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고등교육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을 초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으로 나누어서 1986~87년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그 구성비에 있어서 초전문대의 비중이 상당히 큰 축에 속하여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미국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한국의 1993~94년의 비율은 35.2대 57.5대 7.4로서 미국의 28.8대

50.9대20.3이나 프랑스의 18.5대66.0대15.5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학원의 비중이 낮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4.1대91.8대5.1로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은 8.3대91.7(대학원 포함)로 직업교육이 고등교육기관보다는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제도는 각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제도의 개편을 위하여는 노동시장의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대하여는 마지막 장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주석 1)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테이프』, 1992.

주석 2) '통학에는 재수생도 역시 포함된다. 이는 남성의 경우 거의 40%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 勞動市場

앞에서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초반에 중등교육의 대중화가 실현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중등교육 중 인문계의 비중이 상승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고등교육 이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상대적 구성은 균등하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인문사회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학정원 확대의 효과는 남성 노동력에 있어서보다 여성 노동력에 있어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정원의 증원정책은 남성 청년층의 재수생수의 감소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여성의 대학교육의 기회는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연도에는 전문대학의 교육이 확대되어 특히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상당수를 흡수하게 되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1980년대 이후의 교육 수준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층 노동력의 공급은 학교 교육의 종료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학교졸업후의 경과연도에 따른 경제활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청년층 노동시장의 파악을 위하여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통계청의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연령별 통계만이 발표되므로 우선 연령별 청년층의 노동력 현황을 고찰하고 『교육통계연보』로부터 학교졸업자의 졸업후의 취업 상황을 점검하며 부문별 인력공급의 불일치 문제의 점검을 위하여 청년층의 산업별·직종별 취업 현황을 고찰한다.

가. 경제활동 현황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경제활동참가율¹⁾과 취업비율²⁾ 두 가지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 의사를 가진 인구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가용노동력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히 청년층은 비경제활동과 실업상태를 빈번히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신뢰성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떨어진다.³⁾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인구 비율을 같이 살펴본다.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 현황을 15~19세, 20~24세, 25~29세의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남녀 및 농가, 비농가 포함) 10대 노동력(15~19세)의 경우는 1980년대의 중등교육의 대중화를 반영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시현하였으며, 20~24세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25~29세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이 발견된다(표 Ⅲ-16 및 표 Ⅲ-17 참조). 취업인구 비율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추세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도 그 변화추이를 남성과 여성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대조적인 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15~19세 연령층에 있어서는 남녀 공히 중등교육의 대중화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저하가 관찰되는 데에 반하여 20~24세 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이 저하된 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연령의

<표 Ⅲ-16>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1982~93)

(단위 : %)

• 남녀총수 - 전국

| 연 령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15~19 | 24.9 | 21.8 | 18.5 | 17.5 | 16.7 | 17.3 | 15.1 | 15.0 | 14.6 | 14.9 | 14.5 | 13.5 |
| 20~24 | 62.2 | 59.9 | 57.6 | 58.5 | 59.8 | 60.3 | 60.7 | 62.2 | 62.8 | 63.5 | 62.5 | 61.3 |
| 25~29 | 63.5 | 61.9 | 61.6 | 63.0 | 63.5 | 64.8 | 65.0 | 66.9 | 67.3 | 67.8 | 68.1 | 67.9 |

• 비농가 남성

| | | | | | | | | | | | | |
|-------|------|------|------|------|------|------|------|------|------|------|------|------|
| 15~19 | 21.6 | 18.1 | 15.3 | 14.2 | 13.6 | 14.1 | 11.9 | 12.2 | 11.2 | 11.6 | 11.9 | 10.7 |
| 20~24 | 70.4 | 66.6 | 61.3 | 60.0 | 59.5 | 59.2 | 58.1 | 58.7 | 59.5 | 59.1 | 57.2 | 55.7 |
| 25~29 | 94.3 | 92.7 | 90.7 | 90.8 | 90.1 | 89.9 | 89.9 | 91.1 | 92.2 | 92.5 | 91.7 | 90.9 |

• 비농가 여성

| | | | | | | | | | | | | |
|-------|------|------|------|------|------|------|------|------|------|------|------|------|
| 15~19 | 32.3 | 30.2 | 25.2 | 23.6 | 22.4 | 23.1 | 21.0 | 20.0 | 20.1 | 19.9 | 18.2 | 17.4 |
| 20~24 | 54.1 | 54.7 | 53.1 | 55.9 | 58.8 | 60.5 | 61.4 | 63.5 | 64.5 | 65.7 | 65.1 | 64.5 |
| 25~29 | 29.8 | 29.4 | 31.4 | 34.4 | 35.8 | 38.9 | 39.4 | 42.0 | 41.9 | 42.1 | 43.6 | 43.9 |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테이프, 1992.

<표 Ⅲ-17> 청년층 노동력의 취업인구 비율의 추이(1982~93)

(단위 : %)

• 남녀총수 - 전국

| 연 령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15~19 | 21.8 | 19.4 | 16.6 | 15.6 | 15.1 | 15.9 | 13.8 | 13.8 | 13.2 | 13.5 | 13.0 | 12.0 |
| 20~24 | 56.7 | 54.8 | 52.9 | 52.8 | 54.5 | 55.9 | 56.6 | 58.2 | 58.9 | 59.2 | 58.2 | 56.1 |
| 25~29 | 60.2 | 58.7 | 58.8 | 59.8 | 59.8 | 62.1 | 62.5 | 64.3 | 64.7 | 65.5 | 65.5 | 64.9 |

• 비농가 남성

| | | | | | | | | | | | | |
|-------|------|------|------|------|------|------|------|------|------|------|------|------|
| 15~19 | 17.5 | 15.3 | 13.1 | 12.3 | 11.9 | 12.6 | 10.5 | 11.3 | 10.1 | 10.3 | 10.5 | 9.4 |
| 20~24 | 59.9 | 56.0 | 53.1 | 50.5 | 51.1 | 52.5 | 52.0 | 53.1 | 53.9 | 53.7 | 52.1 | 48.9 |
| 25~29 | 87.2 | 85.7 | 84.9 | 84.2 | 83.2 | 84.7 | 85.3 | 86.3 | 87.6 | 88.7 | 87.2 | 85.9 |

• 비농가 여성

| | | | | | | | | | | | | |
|-------|------|------|------|------|------|------|------|------|------|------|------|------|
| 15~19 | 28.7 | 27.2 | 22.9 | 21.3 | 20.5 | 21.4 | 19.5 | 18.4 | 18.3 | 18.3 | 16.5 | 15.6 |
| 20~24 | 50.4 | 51.6 | 50.1 | 52.4 | 55.2 | 57.3 | 58.3 | 60.5 | 61.6 | 62.1 | 61.2 | 60.2 |
| 25~29 | 29.3 | 29.0 | 30.9 | 33.7 | 35.2 | 38.4 | 38.6 | 41.3 | 41.1 | 41.2 | 42.7 | 42.8 |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테이프,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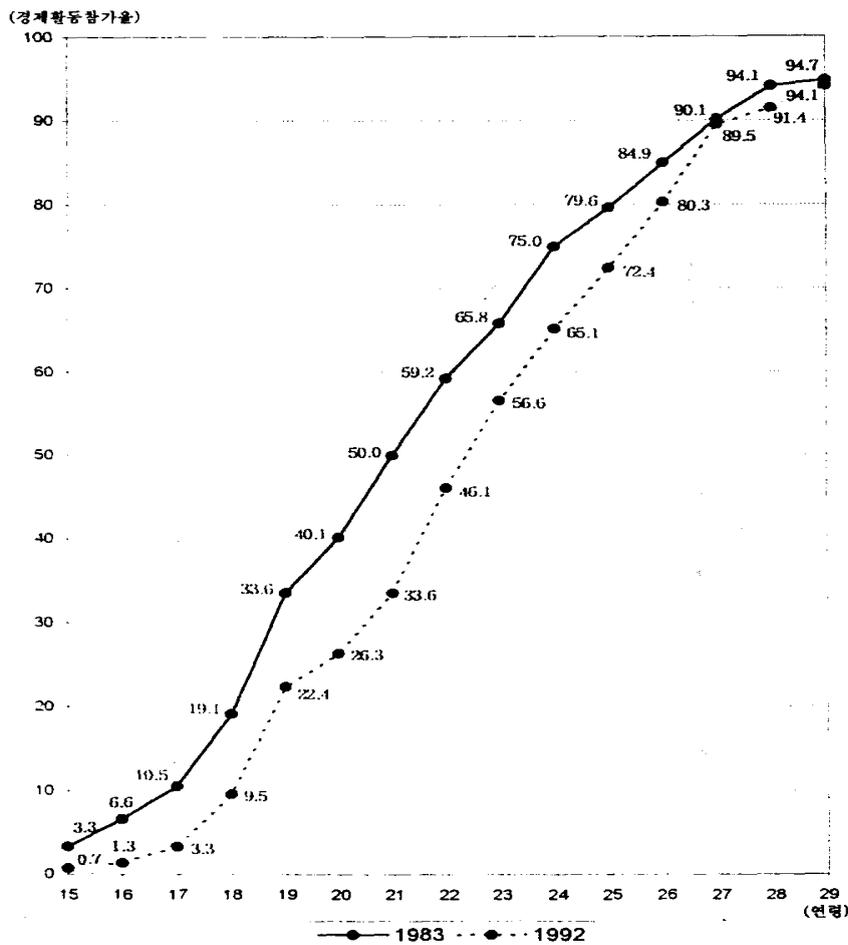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은 남성의 경제활동의 저하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상쇄된 결과임이 드러난다. 1980년대 20대 전반 여성 노동력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출산율이 하락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반면에 25~29세 연령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제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상승은 주로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보다구체적으로는 비농가 청년층 노동력에 있어서 10대 노동력(15~19세)에 있어서는 중등교육의 대중화로 인한 경제활동의 저하현상이 남성에 있어서 여성보다 빠르게 진행되어(비농가)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대 초반의 약 20%에서부터 1990년대에는 약 10%로 하락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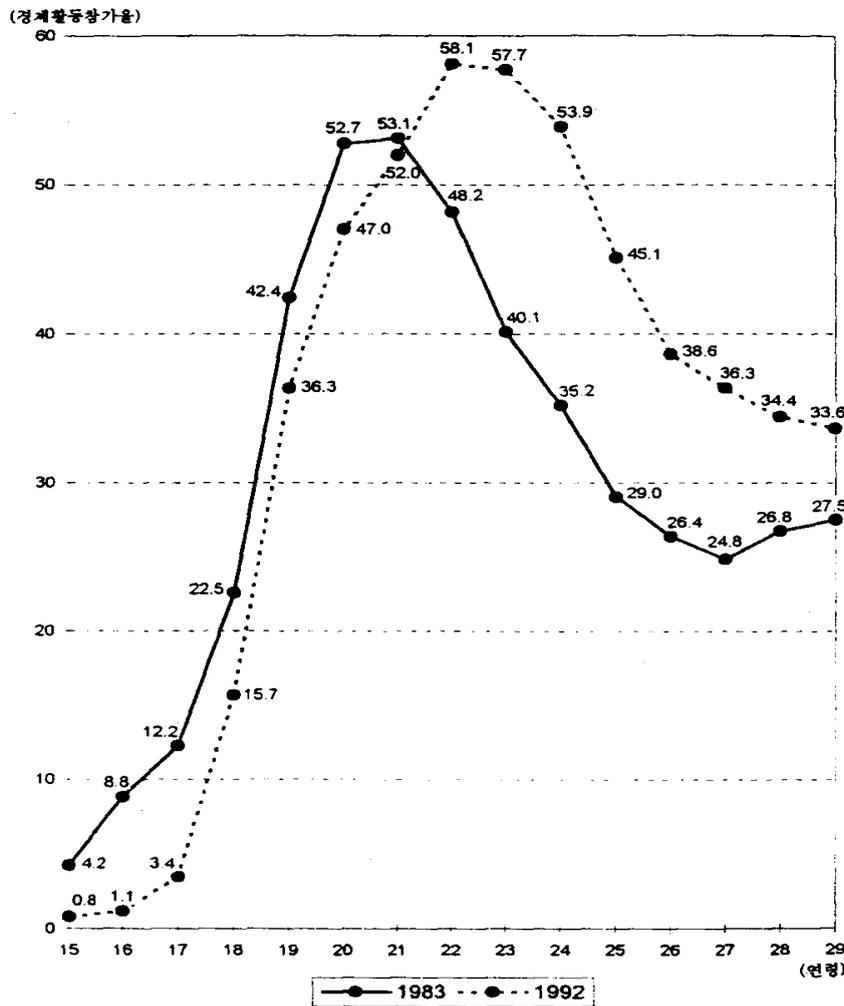
으며, 여성의 경우는 약 30%에서부터 1993년의 17%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20대 전반의 연령에 있어서는 특히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남성 노동력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1982년의 약 70%로부터 1993년의 56%에 이르기까지 무려 15%포인트가 하락한 데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1982년의 54%로부터 1993년의 64%에 이르기까지 약 10%포인트 상승하였다. 20대 후반의 연령에서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1982년의 약 30%로부터 1993년도 약 44%에 이르기까지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추세의 변화를 좀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1983년과 1992년의 『고용구조조사』 테이프로부터 각 연령별 경제활동 추이를 도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⁴⁾ [그림 Ⅲ-5]와 [그림 Ⅲ-6]은 1983년과 1992년의 청년층 남녀의 각 연령별 경제활동 추이를 비교하여 보여 주는데, 15~29세까지의 각 연령별 경제활동 추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녀 전체적으로는 22세를 분기점으로 하여 22세까지는 1992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으며 22세 이상에서는 1992년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2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든 연령에 있어서 1983년보다 낮았다. 이는 고학력화, 즉 학교 교육의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결과적으로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연령이 결과적으로 1~2세 가량 지연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 노동력에 있어서는 그 변화가 보다 뚜렷하다. 여성의 경우 1983년에는 20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을 이루었으나 1992년에 이르러서는 22세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력이 1980년대에 고등교육 기회를 통한 본격적인 인적자본의 형성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전반 이전에는 여성 노동력이 학교 교육을

[그림 Ⅲ-5]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비교-남성(1983, 1992)



[그림 Ⅲ-6]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비교-여성(1983, 1992)



통한 본격적인 인적자본의 형성이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연령이 더 일렀으며,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주로 가사노동으로의)도 더 이른 연령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여성 청년층 노동력도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한 본격적인 인적자본의 형성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노동시장에의 진입연령도 늦어졌으며, 인적자본의 양이 증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의 기회비용도 커지게 되어 퇴출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다.

<표 Ⅲ-18>에서 보듯이 비경제활동이 사유별 구성은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경제활동의 사유별 구성에 있어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남녀 모두 모든 연령에 있어서 가사노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의 비중은 낮아졌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임금의 상승에 따라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이 높아졌다고 하는 점을 의미한다. 남성 청년층 노동력에 있어서의 1983년과 1992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0대 노동력(15~19세)에서는 비경제활동의 구성 면에서의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의 10대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현상은 단순히

<표 Ⅲ-18> 비경제활동의 사유별 구성(1983~92)

(단위 : %)

| | 남 자 | | | 여 자 | | |
|----------|-----|------|------|------|------|-----|
| | 가 사 | 통 학 | 기 타 | 가 사 | 통 학 | 기 타 |
| • 15~19세 | | | | | | |
| 1983 | 0.8 | 97.5 | 1.8 | 5.0 | 94.3 | 0.7 |
| 1986 | 1.0 | 96.2 | 2.8 | 4.4 | 94.3 | 1.3 |
| 1989 | 0.7 | 96.8 | 2.5 | 2.8 | 96.0 | 1.2 |
| 1992 | 0.5 | 96.5 | 3.1 | 2.0 | 96.3 | 1.7 |
| • 20~24세 | | | | | | |
| 1983 | 3.6 | 81.9 | 14.2 | 78.7 | 18.9 | 2.4 |
| 1986 | 2.8 | 82.4 | 14.8 | 66.8 | 28.9 | 4.3 |
| 1989 | 2.0 | 85.2 | 12.8 | 56.1 | 39.1 | 4.8 |
| 1992 | 1.7 | 83.9 | 14.3 | 42.4 | 49.8 | 7.8 |
| • 25~29세 | | | | | | |
| 1983 | 5.6 | 70.6 | 23.0 | 98.7 | 0.4 | 0.8 |
| 1986 | 5.1 | 66.9 | 28.1 | 97.1 | 1.1 | 1.8 |
| 1989 | 4.0 | 69.1 | 26.9 | 96.7 | 0.8 | 2.5 |
| 1992 | 2.7 | 66.8 | 29.9 | 94.6 | 1.5 | 3.9 |

주 : 1983년은 14~19세, 1992년의 '가사'는 '육아'를 포함한.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각년도.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통학)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20대 전반의 노동력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반영하여 통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요소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의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노동력에 있어서는 가사와 통학의 비중이 비경제활동 사유별 구성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하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므로 '기타' 항목의 비중이 비경제활동의 사유에서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 연령의 경제활동의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여 지는데 이는 청년층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반면에 여성 청년층 노동력은 남성 청년층 노동력에 비하여 이 시기에 훨씬 더 동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였음이 드러난다. 비경제활동의 사유별 구성에서 '가사'의 비중은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 전반에 있어서 현격히 드러난다. 또한 '통학'의 비중은 20대 전반의 노동력에 있어서 현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 수준을 1992년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19 참조). 우선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외국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각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노동력(15~1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등교육의 대중화 수준의 국제비교에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여타 선진국의 10대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는 대부분 파트타임 노동인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한국의 10대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의 10대 노동력에 있어서 파트타임 노동이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의 한국의 남성 20대 전반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7%로서 이는 일본(74.5%), 미국(74.6%), 대만(68.8%)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의 현황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의 고등교육의 대중화 수준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대만 등에 비해서도 한국의 청년층의 경제활동 수준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0대 후반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기간노동력(3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청년층 노동력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의 진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 연령층의 참가율은 91.1%로서 30~39세의 97.0%보다 크게 낮아서 이 연령대에 있어서도 역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96.4%(25~29세), 98.0%(30~34세)로서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이 연령대에서 거의 완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역시 93.9%(25~29세), 97.6%(30~34세)

<표 III-19> 각국의 청년층 노동력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1992)

(단위 : %)

• 남 자

| | 한 국 | 일 본 | 대 만 | 싱가포르 | 프랑스 | 독 일 | 스웨덴 | 영 국 | 미 국 |
|--------|------|------|------|------|------|------|------|------|------|
| 15~19세 | 11.5 | 19.4 | 21.1 | 30.0 | 11.9 | 40.7 | 42.7 | 59.5 | 40.5 |
| 20~24세 | 57.7 | 74.5 | 68.8 | 82.3 | 65.0 | 77.8 | 80.0 | 85.4 | 74.6 |
| 25~29세 | 91.1 | 96.4 | 93.9 | 97.0 | 93.2 | 86.8 | 87.0 | .. | 88.9 |

• 여 자

| | | | | | | | | | |
|--------|------|------|------|------|------|------|------|------|------|
| 15~19세 | 17.4 | 17.6 | 21.3 | 28.6 | 7.9 | 34.8 | 47.1 | 57.2 | 38.5 |
| 20~24세 | 65.3 | 75.6 | 62.6 | 80.2 | 56.1 | 73.4 | 80.3 | 72.5 | 69.1 |
| 25~29세 | 44.3 | 64.0 | 61.8 | 77.8 | 81.4 | 70.8 | 85.0 | .. | 74.2 |

주 : ..는 未詳을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1994.

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74.6%, 88.9%로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대학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20.3%)고 하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성 청년층 노동력에 있어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된다. 한국의 10대 노동력의 경제활동참여의 비중은 낮으며, 20대 전반의 노동력의 경제활동은 외국과 비교하여 큰 격차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3%로서 일본(75.6%), 대만(62.6%), 독일(73.4%), 미국(69.1%)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20대 후반 노동력의 경제활동은 20대 전반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국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아직도 일반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서구 국가들은 20대 후반 노동력의 경제활동이 20대 전반에 비하여 오히려 활발하며, (20대 전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미국(69.1%, 74.2%), 프랑스(56.1%, 81.4%), 스웨덴(80.3%, 85.0% 등)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64.0%), 대만(61.8%), 싱가포르(77.8%)도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구 각국의 경우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수준은 20대 후반이 20대 전반에 비하여 활발하다고 하는 사실은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20대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현황을 199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과 연령계층별로 비교하여 보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이 20대 전반에 가장 높으며, 20대 후반에는 이보다 약간 감소하고 30대 전반에 이르러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20대 전반에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빠른 연령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여성의 인적자본으로부터의 수익기간을 짧게 하여 인적자본의 형성, 즉 생산성의 향상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 연령층(20대 후반)의 경제활동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다.

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현황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의 현황이 교육정도별로는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현황의 고찰을 위하여 각 연령계층 교육정도별 취업자수와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1983년과 1992년에 있어서의 각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비교하고, 현황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도 연계하기 위하여 각 학력별 졸업자의 취업현황도 아울러 고찰한다.

각 연령계층별 및 교육정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육의 변화가 교육

기간이라는 회임기간을 거쳐서 노동시장의 변화로 결과함을 알 수 있다(표 Ⅲ-20 참조). 15~24세 연령계층에 있어서는 남성 중졸 이하의 취업자수는 1983년에 비하여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등학교까지의 중등교육을 국민 다수가 이수하게 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중졸 이하 학력의 저임 단순노동력은 이제 한국에서 점차 희소해져 가는 노동력임이 파악된다. 고졸 취업자는 중등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반면 초전문대졸은 1980년대를 통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 노동력의 경우 군복무가 있으므로 대졸 인력은 24세 이하의 연령층에 있어서 아직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령계층은 여성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파악된다. 중졸 이하의 노동력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졸 노동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동시에 전문대졸과 대졸의 노동력이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 후반(25~29세)의 연령계층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중졸 이하의 학력계층은 역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초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노동력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1992년의 이 연령층은 1980년대 전반에 대학생이었던 연령계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연령계층의 남성 취업자수는 1980년대 전반에 남성 대학생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증가할 것이나, 1980년대 중반의 남성 대학생수의 정체의 결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에 있어서는 1980년대의 대학생이 노동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1992년 대졸 취업자의 급속한 증가가 시작되었다. 교육수준의 상승은 20대 전반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남성에게

<표 Ⅲ-20> 연령계층별 · 교육정도별 취업자수 및 취업비율

(단위 : 천명, %)

| 남 자 | 취업자수 | | | | 취업비율 | | | |
|----------|-------|-----|------|-------|-------|------|------|-------|
| | 중졸 이하 | 고 졸 | 초전문대 | 대졸 이상 | 중졸 이하 | 고 졸 | 초전문대 | 대졸 이상 |
| • 15~24세 | | | | | | | | |
| 1983 | 625 | 394 | 48 | | 58.6 | 38.7 | 4.5 | |
| 1986 | 359 | 437 | 40 | 17 | 42.1 | 51.2 | 4.7 | 2.0 |
| 1989 | 235 | 505 | 54 | 20 | 21.4 | 62.0 | 6.6 | 2.5 |
| 1992 | 138 | 506 | 89 | 27 | 18.2 | 66.6 | 11.7 | 3.6 |
| • 25~29세 | | | | | | | | |
| 1983 | 665 | 638 | | 229 | 43.4 | 49.0 | - | 14.9 |
| 1986 | 552 | 862 | 125 | 228 | 31.2 | 48.8 | 7.1 | 12.9 |
| 1989 | 369 | 946 | 156 | 254 | 21.4 | 54.8 | 9.0 | 14.7 |
| 1992 | 203 | 833 | 165 | 358 | 13.0 | 53.4 | 10.6 | 23.0 |
| 여 자 | | | | | | | | |
| • 15~24세 | | | | | | | | |
| 1983 | 527 | 534 | 72 | | 46.5 | 50.3 | 6.4 | |
| 1986 | 381 | 688 | 60 | 52 | 32.3 | 58.3 | 5.1 | 4.4 |
| 1989 | 236 | 825 | 86 | 67 | 19.4 | 68.0 | 7.1 | 5.5 |
| 1992 | 93 | 878 | 151 | 101 | 7.6 | 71.8 | 12.3 | 8.3 |
| • 25~29세 | | | | | | | | |
| 1983 | 293 | 152 | | 58 | 58.3 | 34.2 | | 11.5 |
| 1986 | 332 | 260 | 35 | 62 | 48.2 | 37.7 | 5.1 | 9.0 |
| 1989 | 258 | 359 | 49 | 93 | 34.0 | 47.3 | 6.5 | 12.3 |
| 1992 | 129 | 381 | 66 | 154 | 17.7 | 52.2 | 9.0 | 21.1 |

주 : 1983년의 대졸은 초전문대졸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특별조사』, 각년도

어서 1983년 43%였던 중졸 이하 학력의 구성비가 1992년 13%로 하락하였으며 15%였던 초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의 구성비가 1992년 34%까지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도 1983년 58%였던 중졸 이하 학력이 1992년 18%까지 감소하였으며 11.5%이던 초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계층의 구성비는 1992년 30%까지 상승하였다.

1983년과 1992년의 『고용구조조사』 테이프로부터 각 연령별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다(표 Ⅲ-21, 그림Ⅲ-7 및 Ⅲ-8 참조). 앞서 1980년대의 남성 청년층 노동시장은 여성

노동시장에 비하여 큰 개선은 없었음을 고찰한 바 있는 데, 각 연령별 경제활동의 추이를 면밀히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있어서 노동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였던가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1983년의 『고용구조조사』에서는 특히 청년층에 있어서 실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와의 구별이 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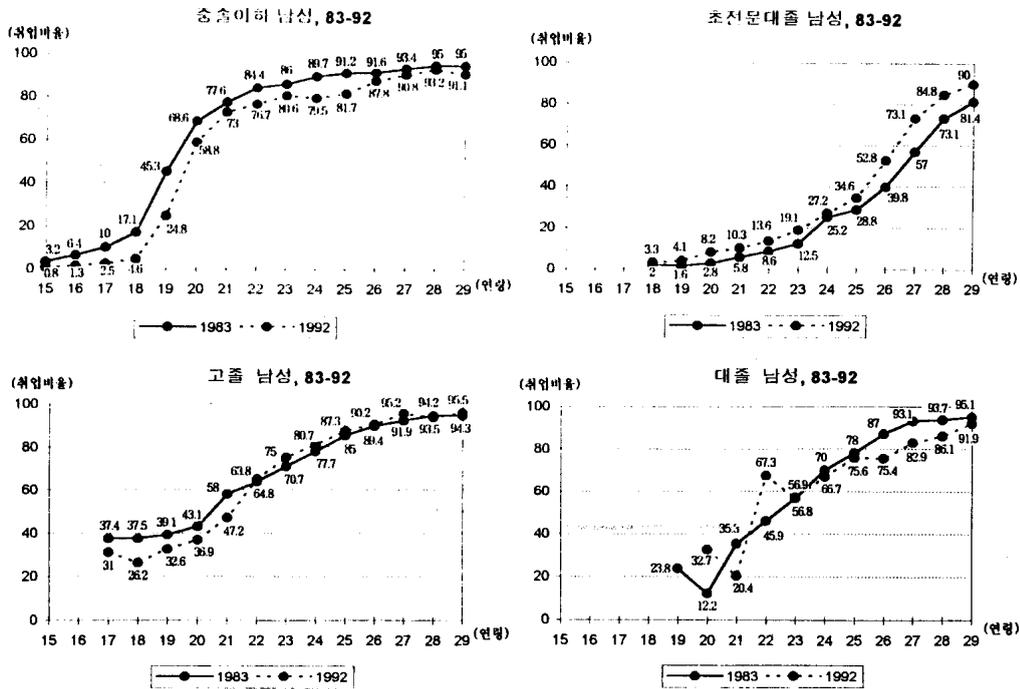
<표 Ⅲ-21> 1983년과 1992년의 연령별·교육정도별 취업비율의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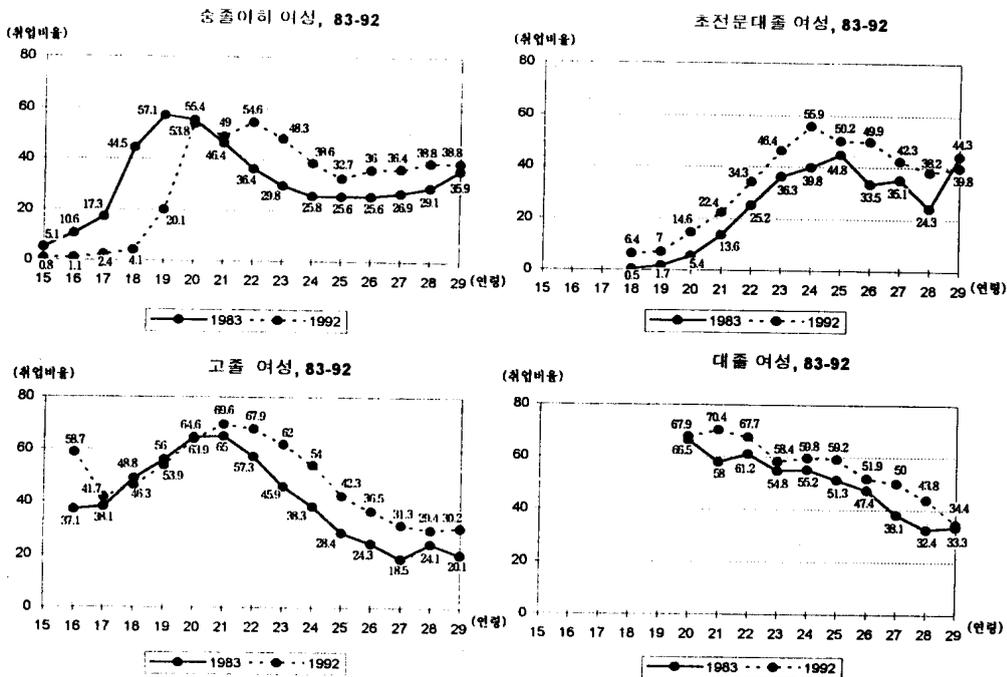
| · 남 자 | | | | | | | | | | |
|-------|-------|------|--------|------|------|------|---------|------|--------|------|
| 연 령 | 전 학 력 | | 중 졸 이하 | | 고 졸 | | 초 전 문 대 | | 대 졸 이상 | |
| | 1983 | 1992 | 1983 | 1992 | 1983 | 1992 | 1983 | 1992 | 1983 | 1992 |
| 15 | 3.2 | 0.8 | 3.2 | 0.8 | 3.6 | | | | | |
| 16 | 6.5 | 1.3 | 6.4 | 1.3 | 25.1 | | | | | |
| 17 | 10.6 | 3.3 | 10.0 | 2.5 | 37.4 | 31.0 | 6.1 | | | |
| 18 | 19.0 | 9.4 | 17.1 | 4.6 | 37.5 | 26.2 | 2.0 | 3.3 | | |
| 19 | 33.2 | 22.4 | 45.3 | 24.8 | 39.1 | 32.6 | 1.6 | 4.1 | 23.8 | |
| 20 | 39.5 | 26.3 | 68.6 | 58.8 | 43.1 | 36.9 | 2.8 | 8.2 | 12.2 | 32.7 |
| 21 | 50.1 | 33.6 | 77.6 | 73.0 | 58.0 | 47.2 | 5.8 | 10.3 | 35.3 | 20.4 |
| 22 | 58.7 | 45.6 | 84.4 | 76.7 | 63.8 | 64.8 | 8.6 | 13.6 | 45.9 | 67.3 |
| 23 | 65.6 | 56.0 | 86.0 | 80.6 | 70.7 | 75.0 | 12.5 | 19.1 | 56.8 | 56.9 |
| 24 | 74.6 | 61.3 | 89.7 | 79.5 | 77.7 | 80.7 | 25.2 | 27.2 | 70.0 | 66.7 |
| 25 | 78.9 | 72.1 | 91.2 | 81.7 | 85.0 | 87.3 | 28.8 | 34.6 | 78.0 | 75.6 |
| 26 | 84.4 | 79.8 | 91.6 | 87.8 | 89.4 | 90.2 | 39.8 | 52.8 | 87.0 | 75.4 |
| 27 | 89.8 | 88.8 | 93.4 | 90.8 | 91.9 | 95.2 | 57.0 | 73.1 | 93.1 | 82.9 |
| 28 | 93.2 | 90.5 | 95.0 | 93.2 | 94.2 | 93.5 | 73.1 | 84.8 | 93.7 | 86.1 |
| 29 | 93.9 | 93.3 | 95.0 | 91.1 | 94.3 | 95.5 | 81.4 | 90.0 | 95.1 | 91.9 |
| · 여 자 | | | | | | | | | | |
| 15 | 4.1 | 0.8 | 5.1 | 0.8 | 8.6 | | | | | |
| 16 | 8.6 | 1.2 | 10.6 | 1.1 | 37.1 | 58.7 | | | | |
| 17 | 12.2 | 3.4 | 17.3 | 2.4 | 38.1 | 41.7 | 1.4 | | | |
| 18 | 22.7 | 15.7 | 44.5 | 4.1 | 48.8 | 46.3 | 0.5 | 6.4 | | |
| 19 | 42.4 | 36.3 | 57.1 | 20.1 | 56.0 | 53.9 | 1.7 | 7.0 | 19.9 | |
| 20 | 52.2 | 46.7 | 55.4 | 53.8 | 64.6 | 63.9 | 5.1 | 14.6 | 66.5 | 67.9 |
| 21 | 52.8 | 51.7 | 46.4 | 49.0 | 65.0 | 69.6 | 13.6 | 22.4 | 58.0 | 70.4 |
| 22 | 48.2 | 57.9 | 36.4 | 54.6 | 57.3 | 67.9 | 25.2 | 34.3 | 61.2 | 67.7 |
| 23 | 40.1 | 57.7 | 29.8 | 48.3 | 45.9 | 62.0 | 36.3 | 46.4 | 54.8 | 58.4 |
| 24 | 34.8 | 53.7 | 25.8 | 38.6 | 38.3 | 54.0 | 39.8 | 55.9 | 55.2 | 59.8 |
| 25 | 28.9 | 44.7 | 25.6 | 32.7 | 28.4 | 42.3 | 44.8 | 50.2 | 51.3 | 59.2 |
| 26 | 26.5 | 40.2 | 25.6 | 36.0 | 24.3 | 36.5 | 33.5 | 49.9 | 47.4 | 51.9 |
| 27 | 24.8 | 36.2 | 26.9 | 36.4 | 18.5 | 31.3 | 35.1 | 42.3 | 38.1 | 50.0 |
| 28 | 26.7 | 34.2 | 29.1 | 38.8 | 24.1 | 29.4 | 24.3 | 38.2 | 32.4 | 43.8 |
| 29 | 27.5 | 33.3 | 35.9 | 38.8 | 20.1 | 30.2 | 44.3 | 39.8 | 33.3 | 34.4 |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데이터, 1992.

[그림 Ⅲ-7]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연령별 취업비율 비교(1983~92)



[그림 Ⅲ-8] 여성 청년층 노동력의 연령별 취업비율 비교(1983~92)



확하여 실업인구가 과대추정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취업비율을 양 연도에 있어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남성에게 있어서는 1992년의 취업비율이 1983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20세 이후의 연령계층에 있어서 취업비율이 상승하였다. 그

러므로 전반적으로 노동의 수요측면에서는 1992년의 상황이 1983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1992년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악화의 원인은 노동의 공급측면에 있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노동정책의 목표집단이 되어야 할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집단을 연령계층별·교육정도별로 파악되면 1992년에 있어서 남성 노동력 중에서는 19세 이하의 중졸 이하 학력계층, 21세 이하의 고졸계층, 그리고 20대 후반의 대졸 이상의 학력계층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19세 이하의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 있어서 취업비율19983년에 비하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계층에 있어서는 취업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남성 초전문대졸업자, 그리고 초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취업비율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20대 후반의 남성 대졸자는 대학원 진학 등 상급학교의 진학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형성된 인적자본의 내용(즉, 전공)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 교육 정책적 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저학력 노동력, 특히 노동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졸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층이 취업보다는 재수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보다 다양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만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고등교육의 인문화가 고학력 인력의 구직난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생의 졸업후 취업의 실태를 비교할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나 있는 학교 졸업생의 졸업후 진로는 졸업 당시의 취업상황을 나타내므로 졸업 이후의 취업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 외에는 달리 발표되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교육통계연보』에 발표되는 바의 졸업자의 취업률로서 각급 학교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전문학교의 경우 남성의 취업률은 상승추세에 있으며 또한 졸업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교)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1983년에 비하여 1986년에는 취업률이 하락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 연도에는 졸업정원제 실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표 Ⅲ-22 및 표 Ⅲ-23 참조). 1983년의 대학(교) 졸업생은 대학정원의

<표 Ⅲ-22> 전문대학 졸업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

(단위 : 천명, %)

| • 남 자 | | | |
|-------|------|------|------|
| | 졸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 1983 | 48 | 14 | 29.2 |
| 1986 | 41 | 14 | 34.1 |
| 1989 | 41 | 15 | 36.6 |
| 1992 | 48 | 26 | 53.1 |
| 1994 | 57 | 30 | 52.6 |
| • 여 자 | | | |
| 1983 | 25 | 17 | 68.0 |
| 1986 | 35 | 17 | 48.6 |
| 1989 | 44 | 26 | 59.1 |
| 1992 | 57 | 38 | 66.7 |
| 1994 | 71 | 44 | 62.0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Ⅲ-23> 대학(교) 졸업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

(단위 : 천명, %)

| • 남 자 | | | |
|-------|------|------|------|
| | 졸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 1983 | 54 | 28 | 51.9 |
| 1986 | 87 | 38.5 | 44.3 |
| 1989 | 107 | 57 | 53.3 |
| 1992 | 113 | 65 | 57.5 |
| 1994 | 107 | 60 | 56.1 |
| • 여 자 | | | |
| | 졸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 1983 | 23 | 10 | 43.5 |
| 1986 | 51 | 13.5 | 26.5 |
| 1989 | 60 | 20 | 33.3 |
| 1992 | 66 | 26 | 39.4 |
| 1994 | 73 | 30 | 41.1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증원실시 이전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대학증원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의 졸업생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졸업생수의 증가는 대학졸업생 노동시장에 충격을 가하여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에 일시적인 혼돈을 초래하였으나 점차 노동시장에서 흡수되어 가는 것으로 이 자료는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의 대학졸업 정원의 확대는 이후 노동시장에서 대학졸업생의 하향취업,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다(박세일, 1982, 1983).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가 없는 대학졸업생수의 증가는 이전의 대학졸업생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향취업을 결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생수가 2배로 증가하였을 때,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2배로 증가한 대학교 졸업생 모두가 이전의 대학교 졸업생이 취업하였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평균치를 택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당연히 평균치는 졸업생수가 적을 때에 비하여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구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이며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생의 증원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학졸업생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대학생이 되지 못하였을 대학졸업생 집단의 취업상황과 이들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였을 경우의 취업상황을 비교하여야 한다.³⁾ 대학교 졸업생수의 확대라는 정책의 목표 자체가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늘어나는 대학교육 수요의 해소, 그리고 국민 경제적인 인적자본의 양성에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므로 하향취업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상당히 부정확한 지표이기는 하나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적인 취업률이 남녀 모두에 있어서 1986년이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 혼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실업의 발생(취업률의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대 후반 남성의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1983년과 1992년을 비교하여 볼 때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나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취업률이 상승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심각한 실업현상의 발생이 없이 질적인 개선(대학교육의 양적인 확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노동시장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1990년 이후) 남성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률의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실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성 대학생수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증가는 없었으며 재수생이 양산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대학을 선택하였으며 전문대학이 졸업생의 취업률에 있어서나 입학생수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인문화 현상, 제조업부문의 인력공급의 감소현상과 관련하여 제조업부문의 인력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공별 학교교육 졸업자의 취업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50% 이하의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70%대의 높은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실업계 중공업계는 실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1990년대에 접어들어 실업계 평균보다는 높은 80%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졸업생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에 비해 공업계 고교의 졸업생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업계 고교의 감소가 주로 비공업계 실업계 고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성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던 1992년의 취업률은 크게 하락하였으며(71.4%), 경기상황이 개선되었던 1994년에는 취업률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81.5%) 하는 사실이다(표 Ⅲ-24 참조).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의 경우 1992년의 취업률(76.6%)이 1994년(71.9%)에 비하여 오히려 높았다고 하는 사실과 대비된다.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경기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⁴⁾ 실업계 전체의 경우 경기상황이 회복된 1994년의 경우 오히려 진학의 비중이 커져서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혹은 전공의 변화를 위하여 전문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현재의 실업계 교육은 피교육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한다. 반면 전문대학의 전체적인 취업률이 향상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연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상승일로에 있다(표 Ⅲ-25 참조).

<표 Ⅲ-24> 공업계열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후 진로의 상황(남자)

| (단위 : 천명, %) | | | |
|--------------|------|-------------|-------------|
| | 졸업자수 | 진학률 | 취업률 |
| 1983 | 67 | 13.5 (20.1) | 32.0 (47.8) |
| 1986 | 66 | 9.0 (13.6) | 45.3 (68.6) |
| 1989 | 63.5 | 6.3 (9.9) | 52.5 (82.7) |
| 1992 | 63 | 5.7 (9.0) | 45.0 (71.4) |
| 1994 | 65 | 11.0 (16.9) | 53.0 (81.5) |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Ⅲ-25> 자연계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상황(남녀총수)

| (단위 : 천명, %) | | | |
|--------------|------|------|------|
| | 졸업자수 | 취업자수 | 취업률 |
| 1983 | 33 | 9.5 | 28.8 |
| 1986 | 37 | 13 | 35.1 |
| 1989 | 39 | 17 | 43.6 |
| 1992 | 50 | 28 | 56.0 |
| 1994 | 60 | 36 | 60.0 |

주 : 1983년은 공학계열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마지막으로 대학의 전공별 학생수 분포의 변화(인문화 경향)가 대학생의 취업상황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생의 전공별 취업상황을 검토할 수 있다(표 Ⅲ-26 참조). 유일한 자료인 『교육통계연보』에는 각 細전공별이 아닌 광의의 계열별 졸업생의 현황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졸업자의 취업추이를 상세히 검토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제약이 따른다. 각 계열별 취업률을 비

교하기 이전에 졸업정원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3년 졸업생과 최근의 1992년, 1994년 졸업생의 취업률을 비교하여 보면 모든 계열에서 최근의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직후의 졸업생에 해당하는 1986년 졸업생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1983년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는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가 점차 상승하여 1990년대에는 졸업정원제 실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대학(교) 전공별 졸업자수 및 취업률(남녀)

(단위 : 천명, %)

| | 인문계 | | 사회계 | | 자연계 | |
|------|-----|------|-----|------|-----|------|
| | 졸업자 | 취업률 | 졸업자 | 취업률 | 졸업자 | 취업률 |
| 1983 | 9 | 22.2 | 16 | 50.0 | 27 | 48.5 |
| 1986 | 22 | 27.3 | 48 | 39.6 | 48 | 39.6 |
| 1989 | 28 | 39.3 | 56 | 30.4 | 56 | 48.2 |
| 1992 | 29 | 41.4 | 66 | 54.5 | 66 | 54.5 |
| 1994 | 29 | 41.1 | 70 | 51.4 | 70 | 51.4 |

주 : 1983년의 인문계는 인문계열+이학계열, 자연계는 이학계열+공학계열. 「문교통계연보」에는 1985년 이후에는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을 통합하여 자연계로 발표하고 있는데 1983년의 경우 자연계 중 이학계와 공학계 졸업생수의 비율은 1 대 3이었으며, 취업률은 각각 35.3%, 53.9%였음.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및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대졸자에 대한 노동시장에 있어서 1986년의 상황은 수요가 부족하였으며 경제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혹은 1986년의 갑작스런 대졸자수의 증가는 대졸자 노동시장에 대하여 혼돈을 초래하여 취업에 지장을 가져왔으나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차차 적응해 감에 따라 정비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대졸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느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는 좀더 분석을 요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1980년대 중반의 이러한 현상이 당시의 청년층 노동력에 있어서 영구적인 효과를 결과하였는가 아니면 졸업직후의 상황에만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현황에서의 연령별·교육정도별 취업비율의 비교를 고찰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83년과 1992년의 연령별 취업구조는 거의 유사한 한편, 취업률에 있어서만 1992년이 높으므로 특별한 문제를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1983년의 구조는 대졸의 경우 20세부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비율이 일면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1992년에는 대학졸업 연령에 해당하는 22세에서 67.3%에 도달한 이후 23세에는 57%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2세를 졸업연령으로 보면, 1986년도 대학졸업생은 1992년의 28세에 해당한다. 이 연령층을 포함한 20대 후반의 연령층의 취업비율이 1983년에 비하여 일면적으로 낮다고 하는 사실은 졸업정원제 직후의 졸업생이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영구적인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치밀한 연구에 의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졸업정원제의 부작용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전공별 졸업생의 취업률의 추이에서는 전공 자체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청년층의 취업구조 현황

노동시장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청년층 노동력의 취업구조의 변화추이를 고찰할 수 있다. 흔히 1980년 중반 이후 생산직·단순기능직 중심의 인력부족 현상이 제기된다(배무기, 1993; 어수봉, 1991). 그리고 특히 청년층 중심의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선호현상,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업의 선호현상이 지적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검증하고 교육정도별·성별 취업구조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Ⅲ-27> 신규취업자수(1975~92)

(단위 : 천명)

| | 남녀총수 | 남 자 | 여 자 |
|------|------|-----|-----|
| 1975 | 347 | 176 | 171 |
| 1976 | 435 | 204 | 232 |
| 1977 | 123 | 65 | 58 |
| 1978 | 136 | 75 | 61 |
| 1979 | 154 | 87 | 67 |
| 1980 | 168 | 85 | 82 |
| 1981 | 158 | 86 | 73 |
| 1982 | 676 | 347 | 330 |
| 1983 | 718 | 371 | 347 |
| 1984 | 926 | 508 | 418 |
| 1985 | 718 | 300 | 328 |
| 1986 | 746 | 397 | 349 |
| 1987 | 776 | 434 | 341 |
| 1988 | 731 | 421 | 310 |
| 1989 | 549 | 329 | 220 |
| 1990 | 498 | 299 | 198 |
| 1991 | 723 | 440 | 283 |
| 1992 | 707 | 434 | 272 |

자료 : 통계청, 「KOSIS」.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력의 양적인 공급을 나타내 주는 우선적인 지표는 신규취업자의 수이다(표 Ⅲ-27 참조). 신규취업자의 추이는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노동력의 수를 나타내 주므로 인구구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며 동시에 신규인력은 특히 노동시장에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1980년대 이후의 신규노동력의 변화추이에서 특히 주목되는 바는 1989년, 1990년의 신규취업자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이 당시에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인구구조상으로도 고교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당시의 연령계층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었다. 한국의 인력난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이 시기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Ⅲ-28>에서 보듯이 교육정도별 신규취업자의 구성비율에서도 1987년을 전후하여 중등교육(고등학교 교육)의 대중화의 결과로 인하여 신규노동력의 교육정도별 구조의 급격한 고도화가 주목된다. 그 이전까지 남성의 경우에 40~50%에 달하는

<표 Ⅲ-28> 교육정도별 신규취업자의 구성비율(1975~92)

(단위 : %)

| · 남 자 | | | | |
|-------|------|------|------|--------|
| | 국졸 | 중졸 | 고졸 | 초대졸 이상 |
| 1975 | 24.7 | 36.0 | 28.4 | 1.9 |
| 1976 | 21.1 | 38.5 | 28.5 | 1.8 |
| 1977 | 24.6 | 39.6 | 24.1 | 1.9 |
| 1978 | 21.4 | 39.5 | 27.8 | 2.0 |
| 1979 | 18.2 | 41.5 | 28.4 | 2.0 |
| 1980 | 16.4 | 40.4 | 31.1 | 2.6 |
| 1981 | 12.9 | 40.0 | 32.9 | 2.9 |
| 1982 | 13.9 | 38.6 | 34.2 | 3.7 |
| 1983 | 9.8 | 38.6 | 37.1 | 4.3 |
| 1984 | 9.8 | 37.4 | 40.8 | 4.2 |
| 1985 | 8.0 | 34.7 | 43.8 | 4.3 |
| 1986 | 6.8 | 32.0 | 46.7 | 4.9 |
| 1987 | 5.9 | 29.6 | 50.1 | 4.9 |
| 1988 | 4.9 | 28.9 | 51.4 | 4.7 |
| 1989 | 4.6 | 25.1 | 50.6 | 5.6 |
| 1990 | 5.5 | 23.0 | 51.6 | 6.1 |
| 1991 | 5.0 | 20.2 | 52.4 | 7.8 |
| 1992 | 4.9 | 19.4 | 55.0 | 7.1 |
| · 여 자 | | | | |
| 1975 | 48.8 | 37.8 | 11.3 | 0.7 |
| 1976 | 41.7 | 45.0 | 11.8 | 0.6 |
| 1977 | 42.5 | 43.6 | 11.4 | 0.5 |
| 1978 | 36.3 | 46.2 | 14.4 | 0.6 |
| 1979 | 35.9 | 44.6 | 15.7 | 0.7 |
| 1980 | 29.3 | 52.8 | 14.7 | 0.9 |
| 1981 | 25.9 | 51.2 | 19.0 | 0.8 |
| 1982 | 21.5 | 46.9 | 29.2 | 1.2 |
| 1983 | 17.0 | 50.5 | 29.8 | 1.4 |
| 1984 | 15.1 | 49.8 | 32.3 | 1.4 |
| 1985 | 13.5 | 48.5 | 31.8 | 1.5 |
| 1986 | 12.3 | 43.3 | 41.2 | 1.6 |
| 1987 | 11.0 | 40.6 | 44.4 | 2.0 |
| 1988 | 10.0 | 39.3 | 45.8 | 2.6 |
| 1989 | 10.1 | 35.8 | 47.3 | 3.4 |
| 1990 | 12.2 | 31.2 | 49.8 | 3.8 |
| 1991 | 12.3 | 26.7 | 52.6 | 4.7 |
| 1992 | 11.0 | 23.5 | 55.4 | 6.2 |

자료 : 통계청, 「KOSIS」.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였던 중졸 이하의 신규노동력의 비중이 이 시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3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25%의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88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단순생산직 중심의 인력부족현상의 일차적인 원인을 대중교육의 확산에 있음이 드러났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이 급격히 고학력화되었으므로 부문별로 생산직 단순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신규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은 영구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청년층 노동력은 이미 고학력화되어 있으므로 단순저임노동의 공급이 앞

으로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조업의 인력난 현상을 보다 더 분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산업별 및 연령계층별·교육정도별 취업상황을 고찰할 수 있다(표 Ⅲ-29, Ⅲ-30 참조). 전 연령층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양자에 있어서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1989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남녀 모두에 있어서 1992년에 감소한 사실이 주목된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대한 밀착도(attachment)가 기간연령층(35~54세)에 비하여 약하므로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 Ⅲ-29>에서 청년층의 연령계층별 산업별 취업구조에서도 이러한 추이는 명확히 나타나 청년층의 제조업 취업비율은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10%포인트, 25~29세 연령에서는 5%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가 단순히 고학력화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노동력의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요인이 존재하였으며 유동력이 비교적 강한 청년층 노동력은 이러한 유인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별로 산업별 취업구조를 고찰하면, 특히 고졸, 초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비율이 1992년에 1989년 이전에 대비하여 증가하였음이 주목된다(표 Ⅲ-30에서 1992년의 서비스업은 그 이전보다 광의로 정의되어 1989년 이전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는 없음에 유의). 이는 특히 여정보다는 남성, 고졸보다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24세 이하의 고졸 남성의 제조업 취업자 비율은 1989년에 비하여 1992년 급격히 하락하였다. 반면에 서비스산업의 취업비율이 괄목할 정도로 신장된 사실이 주목된다. 대졸 남성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의 취업비율의 변화가 발견되나 그 취업비율의 변화의 폭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하여 훨씬 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청년층의 제조업 취업비율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단순히 공급측면에 있어서

<표 Ⅲ-29> 산업별 및 연령계층별 취업구조

(단위 : 천명, %)

| | 남 자 | | | | | 여 자 | | | | |
|-----------------|--------|------|------|-------------------|---------------------|-------|------|------|-------------------|---------------------|
| | 총 수 | 농림어업 | 제조업 | 도소매 음 식 숙박업 | 사회 및 개인 서 비스업 | 총 수 | 농림어업 | 제조업 | 도소매 음 식 숙박업 | 사회 및 개인 서 비스업 |
| • 전연령층 | | | | | | | | | | |
| 1983 | 9,071 | 29.9 | 22.1 | 15.4 | 12.1 | 4,666 | 39.8 | 19.0 | 25.9 | 10.2 |
| 1986 | 9,836 | 24.2 | 24.5 | 16.9 | 12.4 | 5,610 | 35.2 | 21.2 | 26.4 | 12.1 |
| 1989 | 10,690 | 20.9 | 26.8 | 17.8 | 12.0 | 6,411 | 30.3 | 22.4 | 27.7 | 13.2 |
| 1992 | 11,398 | 17.3 | 24.5 | 19.9 | 26.0 | 6,702 | 26.7 | 20.0 | 20.0 | 22.5 |
| • 14~24세 | | | | | | | | | | |
| 1983 | 1,067 | 33.2 | 34.0 | 12.2 | 6.4 | 1,133 | 14.0 | 42.1 | 17.7 | 15.4 |
| 1986 | 854 | 25.3 | 39.6 | 15.3 | 7.7 | 1,181 | 8.9 | 45.2 | 18.7 | 16.7 |
| 1989 | 814 | 17.2 | 43.4 | 17.0 | 8.4 | 1,214 | 5.4 | 42.5 | 20.2 | 19.1 |
| 1992 | 759 | 10.0 | 34.3 | 26.9 | 17.7 | 1,223 | 3.5 | 29.1 | 24.0 | 30.9 |
| • 25~29세 | | | | | | | | | | |
| 1983 | 1,532 | 17.3 | 33.0 | 15.0 | 11.9 | 504 | 26.4 | 17.9 | 30.8 | 18.7 |
| 1986 | 1,767 | 12.9 | 37.6 | 16.5 | 10.9 | 689 | 20.2 | 23.8 | 29.0 | 20.9 |
| 1989 | 1,725 | 9.0 | 41.6 | 17.7 | 11.3 | 758 | 15.4 | 25.9 | 27.3 | 22.8 |
| 1992 | 1,559 | 5.3 | 36.2 | 21.8 | 25.8 | 730 | 7.9 | 24.0 | 27.3 | 38.9 |

주 : 1983년은 14~24세, 1992년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기타 서비스업 중 건설업,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각년도

의 요인, 즉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산업별이 아닌 직종별 청년층의 취업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직의 취업비율이 1992년에 있어서 1989년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감소의 폭이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에서와 같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현상 즉 공급측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생산직의 기피현상,

역시 동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생산직의 취업비율에 있어서는 급속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제조업 취업비율의 급속한 감소가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업 기피현상이라고 청년층의 선호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1989~92년까지의 3년이라는 기간동안 선호체계의 급속한 변화가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된다.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제조업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을 보이는 <표 Ⅲ-32>에서 발
<표 Ⅲ-30> 산업별 및 연령계층별·교육정도별 취업구조

(단위 : 천명, %)

| | 남 자 | | | | | 여 자 | | | | |
|----------|-------|------|------|-------------------|---------------------|-----|------|------|-------------------|---------------------|
| | 총 수 | 농림어업 | 제조업 | 도소매 음 식 숙박업 | 사회 및 개인 서 비스업 | 총 수 | 농림어업 | 제조업 | 도소매 음 식 숙박업 | 사회 및 개인 서 비스업 |
| • 전연령층 | | | | | | | | | | |
| 고 졸 | | | | | | | | | | |
| 1983 | 2,688 | 13.3 | 28.2 | 20.9 | 14.3 | 896 | 6.4 | 25.8 | 34.7 | 17.5 |
| 1986 | 410 | 6.6 | 27.8 | 17.8 | 26.1 | 132 | 2.3 | 11.4 | 15.9 | 62.9 |
| 1989 | 525 | 4.4 | 32.2 | 19.4 | 22.9 | 170 | 1.2 | 13.5 | 17.6 | 58.2 |
| 1992 | 678 | 3.1 | 27.3 | 23.7 | 37.6 | 289 | 1.4 | 11.4 | 21.8 | 63.7 |
| 대 졸 | | | | | | | | | | |
| 1983 | 1,198 | 3.8 | 24.0 | 16.2 | 33.7 | 207 | 1.4 | 7.7 | 15.9 | 67.6 |
| 1986 | 1,122 | 2.5 | 26.0 | 15.9 | 32.3 | 193 | 0.5 | 9.3 | 16.6 | 67.4 |
| 1989 | 1,106 | 1.7 | 26.7 | 16.6 | 33.3 | 250 | 1.2 | 9.2 | 16.4 | 63.6 |
| 1992 | 1,930 | 1.4 | 24.5 | 17.6 | 49.1 | 449 | 0.7 | 9.1 | 14.7 | 74.2 |
| • 14~24세 | | | | | | | | | | |
| 고 졸 | | | | | | | | | | |
| 1983 | 394 | 29.7 | 31.2 | 14.0 | 8.9 | 534 | 5.1 | 33.9 | 24.2 | 18.2 |
| 1986 | 40 | 22.5 | 30.0 | 22.5 | 12.5 | 60 | 3.3 | 15.0 | 16.7 | 56.7 |
| 1989 | 54 | 7.4 | 31.5 | 16.7 | 25.9 | 86 | 1.2 | 18.6 | 16.3 | 55.8 |
| 1992 | 89 | 3.4 | 21.3 | 30.3 | 38.2 | 151 | 1.3 | 11.9 | 19.2 | 64.9 |
| 대 졸 | | | | | | | | | | |
| 1983 | 48 | 16.7 | 31.3 | 16.7 | 14.6 | 72 | 1.4 | 9.7 | 9.7 | 66.7 |
| 1986 | 17 | 5.9 | 35.3 | 11.8 | 23.5 | 52 | 1.9 | 17.3 | 11.5 | 63.5 |
| 1989 | 20 | 5.0 | 30.0 | 20.0 | 25.0 | 67 | 0.0 | 14.9 | 14.9 | 59.7 |
| 1992 | 27 | 3.7 | 22.2 | 22.2 | 44.4 | 101 | 0.0 | 12.9 | 12.9 | 71.3 |
| • 25~29세 | | | | | | | | | | |
| 고 졸 | | | | | | | | | | |
| 1983 | 638 | 10.3 | 35.6 | 18.7 | 12.7 | 152 | 8.6 | 18.4 | 39.5 | 18.4 |
| 1986 | 125 | 5.6 | 35.2 | 16.8 | 18.4 | 35 | 2.9 | 11.4 | 14.3 | 62.9 |
| 1989 | 156 | 3.8 | 39.7 | 17.3 | 17.3 | 49 | 0.0 | 10.2 | 14.3 | 61.2 |
| 1992 | 165 | 3.0 | 32.1 | 23.6 | 33.3 | 66 | 1.5 | 13.6 | 18.2 | 63.6 |
| 대 졸 | | | | | | | | | | |
| 1983 | 229 | 3.5 | 28.4 | 14.4 | 25.8 | 58 | 1.7 | 6.9 | 12.1 | 72.4 |
| 1986 | 228 | 2.6 | 37.3 | 13.6 | 21.9 | 62 | 0.0 | 8.1 | 9.7 | 75.8 |
| 1989 | 254 | 1.6 | 35.8 | 16.1 | 24.0 | 93 | 1.1 | 7.5 | 12.9 | 68.8 |
| 1992 | 358 | 1.4 | 30.2 | 17.6 | 42.7 | 154 | 0.6 | 9.1 | 12.3 | 76.0 |

주 : 1983년은 14~24세, 1992년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기타 서비스업 중 건설업,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각년도.

<표 Ⅲ-31> 학교졸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수(1980~94)

(단위 : 명)

| | 남 자 | | | | 여 자 | | | |
|------|-------|--------|--------|--------|--------|--------|-------|-------|
| | 인문계고졸 | 실업계고졸 | 전문대 | 대학(교) | 인문계고졸 | 실업계고졸 | 전문대 | 대학(교) |
| 1980 | 2,840 | 24,578 | 4,085 | 3,909 | 3,933 | 17,933 | 780 | 340 |
| 1981 | 2,065 | 20,367 | 2,797 | 3,490 | 3,584 | 18,177 | 580 | 297 |
| 1982 | 1,008 | 20,986 | 2,020 | 4,362 | 2,146 | 18,660 | 709 | 328 |
| 1983 | 916 | 19,885 | 3,509 | 5,524 | 2,542 | 20,869 | 835 | 418 |
| 1984 | 1,400 | 28,697 | 3,714 | 6,780 | 3,494 | 22,724 | 951 | 725 |
| 1985 | 1,503 | 30,092 | 4,462 | 7,322 | 5,097 | 28,250 | 1,099 | 850 |
| 1986 | 1,626 | 34,080 | 4,454 | 8,727 | 6,908 | 35,730 | 1,664 | 1,256 |
| 1987 | 2,960 | 43,302 | 5,003 | 13,033 | 9,376 | 34,850 | 2,044 | 1,918 |
| 1988 | 4,561 | 46,167 | 5,645 | 16,183 | 12,049 | 39,116 | 3,757 | 2,497 |
| 1989 | 5,381 | 48,729 | 5,615 | 17,858 | 10,785 | 34,756 | 3,952 | 3,291 |
| 1990 | 5,765 | 49,864 | 6,500 | 18,463 | 9,693 | 38,371 | 4,246 | 3,616 |
| 1991 | 7,054 | 52,989 | 8,603 | 23,361 | 8,787 | 41,389 | 5,181 | 4,330 |
| 1992 | 9,033 | 51,636 | 9,518 | 20,425 | 7,707 | 41,111 | 6,067 | 3,713 |
| 1993 | 9,073 | 48,663 | 9,351 | 17,899 | 6,764 | 40,224 | 5,695 | 3,682 |
| 1994 | 7,840 | 49,106 | 11,021 | 17,617 | 5,262 | 40,332 | 6,458 | 4,615 |

자료 : 통계청, 「KOSIS」.

견된다. 이 표는 각 학교 졸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수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1990년 이후 남성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자 수의 대체관계에서 나타난다. 1990년 이후 전문대 졸업생수가 늘어나면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 취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교 졸업자의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대학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 대학교 졸업생의 하향취업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 졸업생 중 제조업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대졸자보다 대졸자와 보완적인 관계인 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졸업생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표 Ⅲ-32> 청년층 노동력의 생산직 취업자의 비율(1983~92)

(단위 : %)

| | 남 자 | | | 여 자 | | |
|----------------|------|--------|--------|------|--------|--------|
| | 전연령층 | 14~24세 | 25~29세 | 전연령층 | 14~24세 | 25~29세 |
| • 전학력 | | | | | | |
| 1983 | 33.6 | 45.2 | 43.7 | 16.5 | 31.5 | 15.3 |
| 1986 | 36.5 | 50.1 | 46.3 | 18.6 | 32.6 | 20.6 |
| 1989 | 39.1 | 53.4 | 48.8 | 19.4 | 27.8 | 20.7 |
| 1992 | 39.3 | 54.5 | 45.1 | 23.8 | 15.5 | 19.9 |
| • 중졸 이하 | | | | | | |
| 1983 | 27.6 | 49.4 | 46.9 | 13.6 | 51.3 | 15.0 |
| 1986 | 40.7 | 59.6 | 62.7 | 20.1 | 61.7 | 31.0 |
| 1989 | 41.4 | 62.1 | 64.8 | 20.9 | 60.6 | 34.5 |
| 1992 | 46.0 | 68.8 | 71.4 | 29.1 | 50.5 | 41.9 |
| • 고 졸 | | | | | | |
| 1983 | 49.2 | 52.5 | 59.5 | 32.4 | 53.2 | 24.0 |
| 1986 | 42.3 | 46.5 | 49.3 | 18.0 | 21.2 | 15.0 |
| 1989 | 46.4 | 53.9 | 56.6 | 19.9 | 23.2 | 18.1 |
| 1992 | 49.4 | 58.1 | 58.1 | 21.5 | 15.5 | 22.3 |
| • 초전문대졸 | | | | | | |
| 1983 | 37.6 | 38.6 | 42.9 | 12.6 | 14.4 | 12.5 |
| 1986 | 18.8 | 22.5 | 22.4 | 4.5 | 5.0 | 5.7 |
| 1989 | 22.9 | 25.9 | 30.8 | 4.1 | 3.5 | 4.1 |
| 1992 | 22.7 | 24.7 | 26.1 | 4.8 | 3.3 | 6.1 |
| • 대 졸 | | | | | | |
| 1983 | 11.1 | 20.8 | 12.7 | 2.9 | 2.8 | 1.7 |
| 1986 | 6.4 | 11.8 | 7.9 | 2.1 | 1.9 | 1.6 |
| 1989 | 8.3 | 15.0 | 10.6 | 1.6 | 1.5 | 2.2 |
| 1992 | 6.4 | 11.1 | 8.7 | 3.1 | 1.0 | 1.9 |

주 : 1992년은 기능직 + 장치직 + 단순직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특별조사」, 각년도.

주석 1) 경제활동참여율은 (취업자수+실업자수)/인구수로 정의된다.

주석 2) 취업비율은 (취업자수/인구수)로 정의된다.

주석 3)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단순히 직장탐색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경우가 많으며, 직장탐색(실업상태)중인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극성에 있어서 청년층에 비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있어서의 실증적 연구로는 예를 들어 Clark and Summers(1982)를 들 수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의 『고용구조조사』에서는 1992년에 비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층 노동력은 비경제활동과 실업 사이의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조사기준의 변화에 대하여서도 매우 다른 수치를 결과한다. 미국의 CPS 자료에서도 과거 1976, 1977년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견되었다(Clark and Summers(1982, 202쪽).

주석 4) 1983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2.6%, 실업률은 4.1%이었고, 1992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4.7%, 실업률은 2.4%이었으며, 양년도는 모두 경기회복에 있었으므로 거시경제적인 상황은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석 5)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는 미시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복잡한 통계학적 기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주석 6) 경기변화가 있을 때 기업은 고용인원의 변화에 있어서 채용인원의 수에 대한 조정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생산직부문의 신규채용인력이 되는 공업계 고졸자의 채용인원수는 경기상황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다.

IV. 要約 및 結論

본고에서는 한국의 1980년대 이후의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의 현황을 고찰하고 그 실태를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청년층의 교육 수요의 확대,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의 저하, 그리고 여성 고등교육의 증가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이다. 1980년대의 청년층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청년층과는 달리 대다수가 초·중등교육 이수 후에 단순노동의 공급을 통한 노동시장의 진입보다는 연장된 교육을 통한 보다 높은 임금, 보다 향상된 직장을 원하고 있다. 즉 단순노동력의 공급이 아닌 인적자본의 형성을 통한 고임금, 쾌적한 환경의 직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현재까지 국민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경제성장의 목표였다. 그러므로 최근의 저임 단순노동력의 공급부족 현상의 원인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정책수단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맑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저임 단순노동력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이미 고갈되어 버린 생산요소인 것이다. 반면에 청년층이 경제활동보다는 교육을 수요한다고 하는 사실은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욕구가 활발하다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청년층 인력의 관리보다는 인적자본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년층 노동력이 다른 성년층 노동력에 비하여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청년층은 그들의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층은 가정과 직장에 의하여 압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유동성이 특히 강하다. 또한 노동력의 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의 인력수요 구조에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조절하는 부분은 신규인력의 채용부분이므로 경기의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청년층은 그들의 생애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계획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압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의 비경제활동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에게는 큰 회생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경제적으로는 청년의 비경제활동은 그들의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특히 청년층의 인적자본은 그 생산기간이 성년층에 비하여 길므로 국민 경제적인 큰 손실이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써 단순노동의 경우 최근 청년층 노동력으로부터 여성, 고령노동으로의 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임금하에서도 청년층은 단순노동을 함으로 인하여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잃는 결과가 되므로 그 비용이 크다. 그러나 여성이나 고령 노동력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의 가치는 청년층에 비하여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노동의 비용은 작은 것이다. 청년층 노동력에게 근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나 단순노동력의 부족에 대하여 청년층 노동력을 단순노동력으로 유도하는 정책은 국민 경제적 인적자본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청년층 노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들의 인적자본 형성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모두 청년층 노동시장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부에 있어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는 인력의 양성이 노동시장의 외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년층 노동력, 특히 소수민족 노동력이 쉽게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한다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럽은 그들의 고유한 고실업구조가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OECD 선진국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과제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보다는 급격한 기술구조의 변화가 뒤쳐지지 않기 위한 청년층 노동력의 질적 개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OECD, 1990 참조). 본고에서의 경험적 자료분석의 결과에 의하여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걸맞게 개선되지 못한 교육제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지금까지는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학생과 학교와의 관

계 속에서 개선되어 왔으며 교육제도를 통하여 형성된 인적자본의 수요자인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의 공급자인 청년층 노동력과의 관계의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과 같은 사회제도하에서는 기업과 노동력과의 연계(tie)가 강하여 교육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기업에서의 직업훈련에 의하여 보완되나 한국의 경우는 그 연계도 일본만큼 강하지 못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고에서 고찰한 바의 1980년대 이후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제현상에 의하여 드러난다.

한국에서의 초·중등교육의 대중화는 1980년대를 통하여 상당히 달성되었다. 현재에는 국민 대다수가 중학교까지의 초등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중등교육도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초등교육을 이수한 저학력 인력의 노동시장에의 공급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현재는 희소한 노동력으로 되었다. 또한 대다수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므로 교육의 선별효과에 의하여 그 질적 구성도 과거 보다는 못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양질의 저임노동력이 급속히 감소함을 의미한다. 중등교육(고등학교과정)으로 진학한 청년층 중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약 55%는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획일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어서 같은 교과 내용을 다룬다. 이들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35~40%는 상급학교(대학 및 초전문대)에 진학을 하고, 또 그 반수 가량은 재수를 통하여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하며, 나머지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을 거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고졸의 대다수의 인력은 평준화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계로 노동시장에 대비도 하지 못한 채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92년의 고졸자의 취업비율을 1983년과 비교하여 보면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1세에 이르기까지는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계층은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특히 남성층의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한다.

대학의 경우 1980년의 졸업정원제의 실시 이후 상당수의 대학생의 증원이 있었으나 늘어나는 여성의 고등교육 수요에 의하여 남성의 경우는 상당부분 그 기회를 잠식되게 되어 대학생수의 큰 증가는 없었으며, 남성의 경우 일생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기간은 오히려 더 긴 관계로 고등교육의 수요는 더 높아 재수생의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의 확대는 여성 청년층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였으며, 그 구성(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20대 전반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되게 된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학정원의 확대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이다가 점차 개선되어 현재는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후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2년 대학졸업생이 늘어나기 이전인 1983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관행, 학력에 따른 임금설정의 관행은 변하지 않은 채로 대학졸업생의 수가 증가하였을 때, 노동력의 수요의 큰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학졸업생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의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상당한 개선추세를 보여서 20대 초반의 남성 연령층은 20대 후반과 같이 약 10년 전에 비하여 경제활동 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성 대학교 졸업생 노동시장의 개선은 노동시장의 고용력 개선의 결과일 수도 있고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노동시장이 대학교 졸업생수의 증가라고 하는 일시적인 충격에 적응을 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대학교 졸업후 직장으로서의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낮은 경제활동 수준에 있는 20대 후반 남성 노동력 계층이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령층의 상당한 부분이 영구적인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의 상실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학교 졸업생 계층의 경제활동이 저하된 것은 다양성과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없는 양적인 증가만을 결과한 대학정원 증원시책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추세는 특히 남성 노동력에 있어서 전문대학 입학생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재수생 계층이 상당수 흡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고등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요구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질적 개선에 관한 문제이므로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노동시장의 현황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제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대의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처한 교육의 확대에 있어서 배출되는 노동력의 수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과거 국민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의 교육제도는 인력의 선별기능을 상당량 담당하고 있었으며, 고등교육의 이수자수도 적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교육의 수요가 확대되어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중등·고등교육의 기능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는 과거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년층 인력 인적자본의 구성이 노동시장의 요구와는 다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등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의 다양화를 통하여 각 부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교육기회만이 확대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인력의 구성비만 변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이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의 저하를 가져온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대학의 증가가 남성 청년층 노동력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의 효과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 노동력에 대하여는 인력수급의 측면보다는 미래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형성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대책은 교육제도 면에서의 개선과 노동정책으로 분리하여 고려될 수 있다. 교육제도 면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변화된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인적자본 형성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은 두 가지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육제도의 보완으로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risk group)을 목표집단으로 한 정책이다.

교육정책의 측면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양성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평준화에 의하여 같은 교과내용을 학습함은 결과적으로 인력의 선별을 고등학교 과정의 이후로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과거와 같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아니고 현재는 국민대중 교육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등교육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고등학교 자체의 차별화(탈 평준화)가 전제되어야 분업화와 전문화의 이점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최근 두 가지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¹⁾ 첫 번째의 방안은 지금의 인문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직업교육을 기간학제로 발전시켜 유럽형의 복선형 교육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이고(구체적으로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를 50 대 50 수준으로 한다는 계획) 두 번째의 방안은 현행의 단선형 교육제도를 그대로 두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단선형 교육의 문제점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보완하자고 하는 논의이다. 후자에서는 일본의 専修學校,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광범위한 개설을 전제로 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경험적 자료는 두 번째의 안을 보다 현실적인 안으로 지지한다. 현재의 실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지 못하며, 졸업생의 상당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의 예를 보면 안정된 산업구조로 인하여 직능별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이원제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같이 산업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업화·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이 성공적으로 달성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산학연계에 의한 직업교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선진화된 산업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수의 산업계만이 효율적인 산학연계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계에서의 산학연계교육(고등기술학교)은 성공적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인력의 수급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증원이 제조업 인력의 공급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현재의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의 양상을 고려하면 단순화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향후 5~10년 후의 생산성 향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현재보다 감소된 수의 청년층 노동력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상급학교, 산업체 중 어느 곳이 빠른 기술의 진보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적자본 양성의 장소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하여는 향후 인구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이수비율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계층의 절대수가 2000년대 초에는 20% 가까이 감소하게 되므로 절대수에 있어

서 감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는 전문대의 비중이 큰 미국, 혹은 유럽제국과 같은 대중화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상당한 정도 인적자본의 축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추세가 단기간에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각국은 고유한 교육노동시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편이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전문대학, 다양한 고등교육 비중의 증가의 추세에 접어들어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정원의 자율화, 설립의 자율화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수요조건에 보다 더 부응하는 인적자원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기존 대학규모의 확대보다는 설립의 자율화의 방향이 인적자원 구조의 다양화와 고등교육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정원의 확대에 뒤따르지 않는 남성 대학교 졸업생수의 증가, 전문대학으로의 입학의 증가 등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인적자원형성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대학교육비의 인상, 정부의 사회적으로 부족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정책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급고등교육, 즉 대학원의 교육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이 고등교육의 현황과 국제간의 비교에서도 고찰된다.

노동시장의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반, 공업계 고등학교의 2+1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교육구조에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대비한 직업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취업의 방향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일반적인 직업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독일과 일본의 직업훈련제도의 성공은 직능별·기업별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진로설정의 결과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자체의 차별화를 통한 학생과 학생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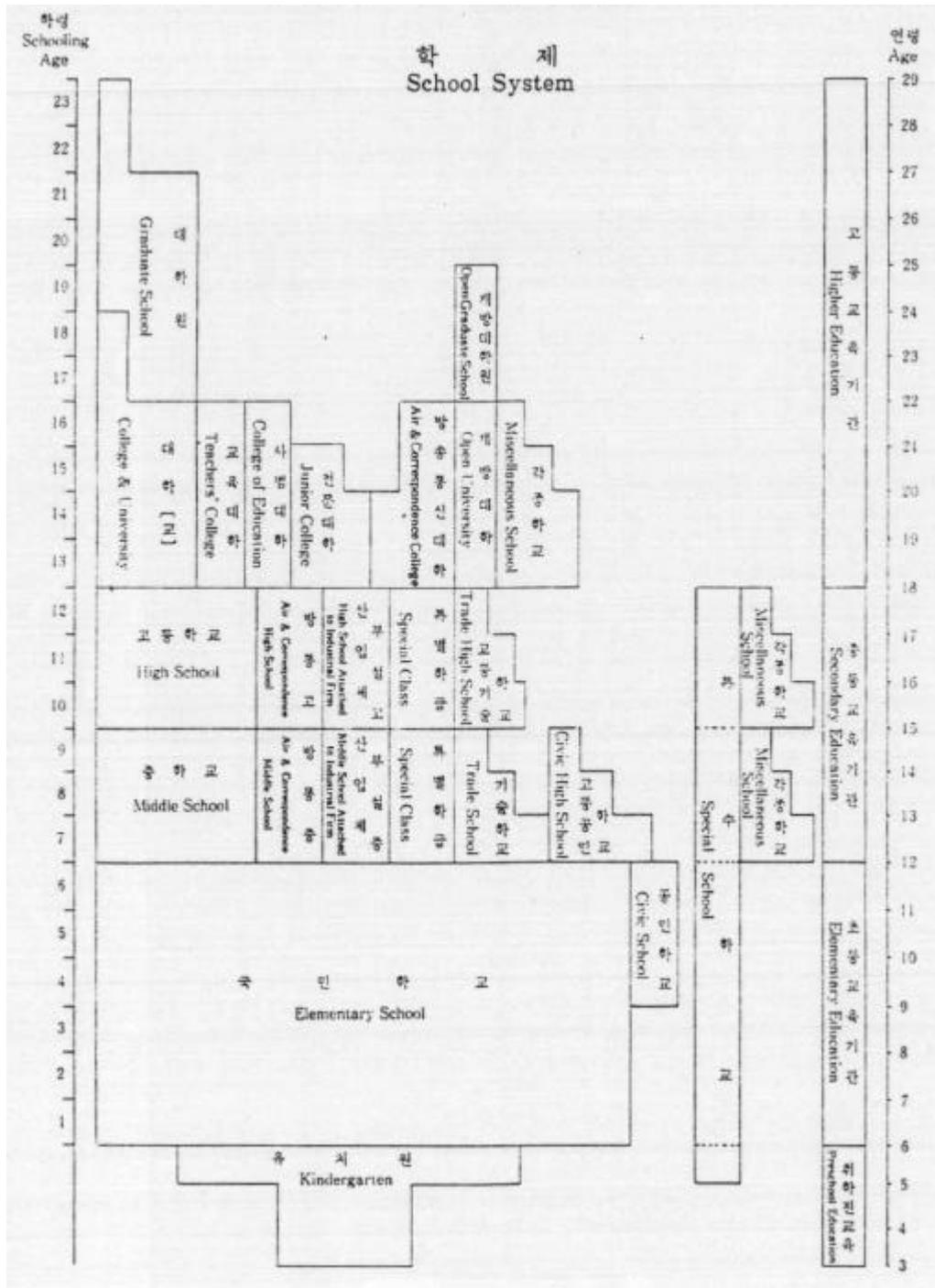
현재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노동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risk group)으로 경험적인 자료는 중졸 및 고졸학력의 20세 이하의 남성 노동력이 드러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고의 경험적 연구결과가 미흡하므로 장래의 연구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실시에 따라 이러한 집단은 구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參考文獻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년도.
- 朴基性, 「우리나라 勞働者의 人的資本의 性格」, 미발간, 성신여자대학교, 1994.
- 朴世逸,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2.
- _____,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II)」,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3.
- 裴茂基, 「韓國의 勞使關係와 雇傭」, 경문사, 1993.
- 魚秀鳳, 「勞働市場變化와 政策課題 - 80年代 就業構造 및 雇傭形態의 變化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李周浩, 「職業訓練과 産業競爭力,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宋大熙, 柳一鎭 編, 한국개발연구원, 1992.
- _____, 「青年層의 雇傭問題와 教育勞働對策」, 한국개발연구원, 1993.
- 鄭眞和, 「技術人力の 排出과 活用 - 工學系 大學卒業子의 就業實態 分析」, 산업연구원, 1993.
- 中央日報 특별취재팀, 「아파 공부하기 싫어요 - 미·일·독·불 등 선진국의 교육개혁 현장에서 본 우리 교육의 오늘과 내일」, 중앙일보사, 1994.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84, 1987, 1989, 1992.
- _____, 「고용구조조사」, 테이프, 1984, 1992.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U.S.A., 1975.
-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U.S.A., 1981.
- Ben-Porath, Y., "The Production of Human Capital and the Life Cycle Model of Earn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5, 1967.
- Clark, Kim and Lawrence H. Summers, "The Dynamics of Youth Unemployment," Chap 7 in Richard B. Freeman and David A. Wise eds., *The Youth*

-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U.S.A., 1982.
- Freeman, Richard B., "Demand for Education," Chapter 6 in Orley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1,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Amsterdam, The Netherlands., 1982.
- Heckman, James J., "A Lifecycle Model of Earnings, Learning, and Consump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1976.
- Mincer, J. and S. Polachek,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4.
- Murphy, Kevin M., *Equilibrium Specializ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86.
- OECD, *Education in OECD countries, 1986-87*. OECD, Paris., 1989.
- _____, *Labour Market Policies for the 1990s*, OECD, Paris., 1990.
- Polachek, S., "Occupational Self-Selection: A Human Capital Approach to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uc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1.
- Spence, M.,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6
- Stiglitz, J.,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5.
- Willis, Robert and Sherwin Rosen, "Education and Self-Sel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975.

<附錄>각급 학교개황
SUMMARY BY SCHOOL LEVEL



주석 1) 이주호(1992, 126쪽).